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9

Vol.3 | No.1 Spring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점과 발전 방향

한반도 상황의 변화 가능성

검열, 러시아 권위주의의 표상

2019년 초, 북한의 첫 번째 외교 행보

러·일 정상회담 평가

2019년 아태지역 진단

미·중 갈등의 양면성

중국 '일대일로'의 다중적 의미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의 멀티 벡터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I)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 Policy Review

2019

Vol.3 | No.1 Spring

『러시아 폴리티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6호 2019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세르게이 발렌티노비치(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원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간사)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원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원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점과 발전 방향
올레그 다비도프 | 3

한반도 상황의 변화 가능성
올레그 다비도프 | 12

검열, 러시아 권위주의의 표상
김용환 | 15

2019년 초, 북한의 첫 번째 외교 행보
올레그 다비도프 | 19

러·일 정상회담 평가
비탈리 슈비코 | 22

2019년 아태지역 진단
비탈리 슈비코,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에브게니 카나예프 | 24

미·중 갈등의 양면성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30

중국 '일대일로'의 다중적 의미
세르게이 루코닌 | 35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의 멀티 벡터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44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변화의 벡터와 동향(I) | 56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변화의 벡터와 동향(II) | 70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점과 발전 방향

한반도 상황의 변화 가능성

검열, 러시아 권위주의의 표상

2019년 초, 북한의 첫 번째 외교 행보

러·일 정상회담 평가

2019년 아태지역 진단

미·중 갈등의 양면성

중국 '일대일로'의 다중적 의미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의 멀티 벡터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I)



『러시아 폴리시 리뷰』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에 제대로 접근할 기회가 없는 국내 정책연구자들과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러시아 이너씨클의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입니다.

발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7년 7월 러시아 최고 싱크탱크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지금까지 계간지로서 총 7회 발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 3,500명, 오프라인으로 약 500명의 연구자/기관들이 저널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8호부터는 1907년에 설립된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 기관 이름으로 공동 발간합니다. 『러시아폴리시리뷰』는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시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폴리시리뷰』 편집위원 일동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점과 발전 방향

올레그 다비도프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은 한반도 관련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안전과 평등한 협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체계 건설이라는 과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최근 북·미 및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러한 과업의 이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해빙의 분위기도 불구하고 당사국들 간의 갈등이 깊어 정치적 선언들이 포괄적인 평화해결을 위한 실천적 이행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 비중을 두고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동북아 안보와 협력적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평화해법, 한국전쟁, 정전협정, 평화조약, 동북아 안보협정.

The article considers a wide range of issues related to the tasks of providing permanent and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blem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instead of the Armistice agreement is a cornerstone in order to build a new non-confrontational framework capable to provide the security of all the involved partie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equal cooperation between them.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alization of those task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American-North Korean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despite a certain warming of the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ition from political declarations to the practical steps in the interests of the comprehensive peaceful resolution has proven to be very difficult because of existing deep contradiction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The special attention was devoted to the Russian approach and perspective. The author illuminates tha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settlement of the key issues on the Korean agenda meets the vital interests of Russia in the context of task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and cooperation arrangement in the region of North East Asia.

Keywords: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the American-North Korean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comprehensive peaceful resolution in Korea, the Korean war, the Armistice agreement, the Peace treaty, th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North East Asia

3년간 지속됐던 한반도 유혈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중단됐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조치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중 제 4조는 외국군의 철수 및 한반도 평화조정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3개월 안에 당사국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네바 회담은 1954년 4월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회담에는 남·북, 소련, 중국, 미국, 프랑스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19개 국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회담에 나선 양 진영 모두 공정한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지 않아 제네바 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적대적 양 진영의 군사·정치적 대립과 세계적인 냉전의 첨예화로 한

반도 평화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과 남한 모두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한반도 분단에 이어 남·북이 서로 상대국의 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만성적 긴장이 지속됐고 군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과거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던 정전협정은 이후 남·북의 지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적 수단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정전협정이 가진 큰 약점으로, 남·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제 25조)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위반사항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과 유엔군 총사령관

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전협정 준수 감독 업무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를 포함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정전협정위반 사건을 남·북 양쪽 군 사령관에 보고하는 것에 불과했다(제 41조).¹⁾

이처럼 정전협정은 새로운 군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안보장치로서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남·북한은 스스로 주변 강대국 중에 동맹국을 찾아 지지를 구해야만 했다. 남한은 1953년 10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북한은 1961년 소련 및 중국과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위 조약들은 모두 군사조항을 포함한다.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1990년대 초부터는 정전협정의 핵심 메커니즘과 구조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특히 국제 정세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은 북한의 주장에 따라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해산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마비되었다. DMZ와 동해 분쟁 수역에서 발생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사건들은 조정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남한의 공격적 행위를 비난하며 더 이상 정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이에 맞서 남한은 미국과 공동으로 군사력을 적용할 권리를 선언했다.¹⁾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관련국

들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전협정이 현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에 이르자,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공고하고 장기적인 평화 보장을 위한 보다 발전된 메커니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6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과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자회담(남·북·미·중)을 열 것을 제안했다. 당시 식량 및 인도주의적 원조가 절실했던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데 1년 여의 시간이 걸렸다. 한반도 상황 안정에 관심을 높은 중국이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허용하는 북·미 평화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회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당시 모든 협상 당사국들은 진지한 다자회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회담의 대부분을 상호 공격이나 비방에 집중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그 상대국들 또한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평화조약의 타당성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가 북한과의 포괄적 거래를 마치 전후

1) Tex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 U.S. Department of State. URL: <https://2001-2009.state.gov/t/ac/rls/or/2004/31006.htm> (검색일: 30.01.2019).
 2) Feron H. Peace with Pyongyang: Legal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une 11, 2018 // 38 North. URL: <https://www.38north.org/2018/06/hferon061118/> (검색일: 25.01.2019).

이들이 반대했던 불쾌한 정치체제를 ‘합법화’ 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³⁾

북한의 지도부 역시 제네바 회담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다. 즉 심각한 기근과 석유 부족 상태에서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는 한편,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북한은 초기에는 이러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이후 과거 적대국간에 열린 4자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는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 장관이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했다.

그 결과 양국은 북·미 간 ‘전면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요지의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대체하여 공식적으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⁴⁾

그러나 이 모든 합의는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북·미 회담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 2002년 미 의회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칭하여 북·미관계의 급격한 냉각을 불러왔

다.⁵⁾

북·미간 갈등에 이어 위협한 군사 프로그램과 핵 미사일 실험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에 심각한 고충대환 위기를 촉발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관련국들은 한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야 했다. 한반도 논의에서 북핵 문제 및 비핵화 과제가 우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018년 초 북한의 지도부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유엔 안보리의 전면적인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되고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자 북한은 적대국인 한·미와 대화의지를 피력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와야 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상당한 양보를 감행했다.

2017년 강경 보수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화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초기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북 관련 정치적 지렛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전망이 열리기 시작했다.

3) Kartman Ch.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Will the Past be Prologue? June 11, 2018 // 38 North. URL: <https://www.38north.org/2018/06/ckartman061118/> (검색일: 25.01.2019).

4)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 U.S. Department of State. URL: https://1997-2001.state.gov/regions/eap/001012_usdprk_jointcom.html (검색일: 30.01.2019).

5)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 The White House. URL: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1/20020129-11.html> (검색일: 24.01.2019).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시대에 뒤쳐진 휴전 상황을 종료하고’ 이어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하기 위해 3자 회담(남, 북, 미) 혹은 4자 회담(남, 북, 미, 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⁶⁾

이어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뒤따라야 할 군비 감축,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조정이 이뤄졌다.

제 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9월)의 일환으로 남·북 국방부 수뇌간에 중요한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남·북 국경 지역에 육·해·공 ‘완충 지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인접 지역을 완충지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완충지대로 지정된 곳의 모든 군 부대는 철수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 훈련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축 및 남북 국경선 인근 감시초소(GP)도 축소된다.

서해에 북방한계선(NLL) 완충지역을 설정한 일도 상당히 중요한 조치다. 북방한계선은 남·북 간 실질적인 해양국경선으로 얼마 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채 남·북 간 유혈 충돌이 발생했

다. 남·북간 해양국경선은 한국전쟁 후 유엔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또한 남·북 국방부 장관은 현 군사정치 상황과 위에 언급한 합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 공동군사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얼마 전 남·북한 군 지도부 간에 핫라인도 개통됐다.⁷⁾

위에 열거한 합의사항 중 실제 이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해 한반도의 군사분쟁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수 있다.

북·미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이 열렸고,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⁸⁾

그러나 한반도의 전반적인 기후가 이처럼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언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재 한·미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언론에서도 이 주제가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단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문서를 채택해야 하는지, 또

6) Panmunjom Declaration on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pril 30, 2018 //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URL: 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news/releases/?boardId=bbs_0000000000000034&mode=view&cntId=54179 (검색일: 24.01.2019).

7)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URL: <https://www.ncnk.org/sites/default/files/Agreement%20on%20the%20Implementation%20of%20the%20Historic%20Panmunjom%20Declaration%20in%20the%20Military%20Domain.pdf> (검색일: 25.01.2019).

8)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June 12, 2018 // The White House. URL: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검색일: 01.02.2019).

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 될 지이다.

이 문제에 관여한 미국의 연구원에 따르면, 평화체제는 ‘지속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약이 뒷받침하는 장치와 메커니즘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제가 우선적이고 그 밖에 평화 조약이나 이와 유사한 문서는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⁹⁾

한편 한국은 핵심 합의에 도달하는 최종 순간에 배제되지만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평화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의 병행 및 그 해결책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지도부가 택하는 시나리오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접근법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공식적으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완전한 평화조약을 ‘현 시점에서는’ 포기하는 대신 이른 시일 내에 북한과 한반도 종전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에서는 종전선언문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치적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인 ‘완고한 장군’ 들을 설득하여 비핵화 반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¹⁰⁾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평화로 나아가는 단계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 미국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어 한·미가 이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한다(여기에 참여할 국가는 아직 미정이다). 이 문서가 발표된다면 보다 광범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안하는 주요 협상 주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논의, 군비 통제, 무력 충돌 예방 및 군사 분야에서의 추후 신뢰 강화 조치 등이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최종 단계에서의 목표는 북한에 확고한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¹¹⁾

실제로 한국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공개하고 국제시찰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기술적’인 종전 선언을 채택하자는 요지로 폼페이오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은 워싱턴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 미 국무부의 주장은 과거의 전쟁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9) Kim D. What North Korea wants from the next US summit. January 23, 2019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URL: <https://thebulletin.org/2019/01/what-north-korea-wants-from-the-next-us-summit/>

10) Hong Hyun-ik.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oul's, Pyongyang's, and Washington's Position and Prospects for 2019 // Current Issues and Policies. 2018. No. 15. URL: http://www.sejong.org/board/bd_news/22/egoread.php?bd=23&itm=&txt=&pg=1&seq=4588 (검색일: 29.01.2019).

11) Moon: North, South aim for declaration this year to end Korean War. September 21, 2018 // The Asahi Shimbun. URL: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809210012.html> (검색일: 24.01.2019).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언(평화조약)에 서명할 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전문가 라인을 포함하여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미 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는 종전협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천명하는 ‘가벼운 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소는 그러한 조치가 북한에 작은 양보를 하는 동시에 북한이 평화와 균축의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력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한·미 양국은 ‘핵우산’ 유지를 포함, 한·미 군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동시에 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정도의 합의에만 이를 수 있을 것이다.¹³⁾

평화조약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당사국의 안보와 동등한 협력을 확보하고 또 다른 대립이 없는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협소한 형식에서 도출한 모든 제한된 합의들은 결국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특정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며, 일시적인 찰나의 효과만 거둘 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종전문제를 가볍고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사람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해당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논의와 서명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

무 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두 사람의 목소리로 65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갈등 종료를 선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평화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전협정을 대신하기 적합한 평화유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비무장지대 활용 및 이를 통상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남·북한 국경으로 전환하는 문제, 해당 기본조약에 근거하여 정상적이고 평등한 남·북 관계 수립,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군대 및 군사 기지의 향후 주둔 문제, 서해 남·북 해역 관련 분쟁 해결 등이다.

이 문제들은 이제 겨우 표면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평화조약은 유엔안보리(한국전쟁 참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모든 서명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특히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북한과 한·미·일을 포함한 그 적대국들 간에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거나 조인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문서들은 순전히 양자 간 또는 삼자 간 문서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문서의 대상은 주로 정치, 경제 또는 기타 분야의 상호관계 관련 문제들이다. 건설적 문서를 통해 상호관계가 개선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 과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으나, 한반도 전쟁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12) Cronin P.M., Lee K. Don't Rush to a Peace Treaty on North Korea. July 27, 2018 // The National Interest. URL: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ont-rush-peace-treaty-north-korea-26936> (검색일: 27.01.2019).

13) An 'End-of-War' Declaration Takes Center Stage in Korea Talks. October 15, 2018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RL: <https://www.usip.org/blog/2018/10/end-war-declaration-takes-center-stage-korea-talks> (검색일: 02.02.2019).

는 없다.

또한 남·북간의 어떠한 화해 제스처도 근본적인 상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의 원인은 남·북이 각각 스스로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생각하고, 헌법 및 기타 법을 동원해 상대국 영토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자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는 ‘권한’을 명시화한 데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표현이 최근 들어 완화되긴 했으나 1948년 제정된 한국의 국가안보법은 북한을 ‘정치적 결사(political entity)’ 또는 ‘반국가단체(foreign anti-government organization)’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나 주민과 무단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형법과 국내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존재한다. 현재 남·북 관계가 진전된 탓에 이러한 ‘뉘앙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 모두가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채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갈등의 근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참여한 어떠한 조약도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가 어려워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만 봐도 알

수 있다.¹⁴⁾

그러나 현재 한국과 북한 모두 이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 남·북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그저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생각한다. 1991년 남·북이 체결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⁵⁾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된 러시아의 이익문제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확립 및 안보강화의 전제조건은 러시아 극동이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편입하고, 남·북·러 및 역내 기타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인프라 및 물류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정치적 긴장 완화라는 목표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의 국제적 노력에 러시아가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우려되는 점은 과거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국가와의 대화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의 실질적인 매개 변수는 주로 남, 북, 미, 중으로 구성된 4자 협상 플랫폼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파트너국들은 러시아의 선한 의지와 협력의 수준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¹⁷⁾

14) 1969년 5월 23일 유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OOH. URL: http://www.un.org/ru/documents/decl_conv/conventions/law_treaties.shtml (검색일: 01.02.2019).

15) Conference of Disarmament. March 25, 1992. URL: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KR%20KP_911213_Agreement%20on%20reconciliation%20non%20aggression%20and%20exchangespdf.pdf (검색일: 26.01.2019).

16) 2018년 12월 24일 A. B. 콜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 TACC 통신 인터뷰 URL: http://www.mid.ru/web/guest/maps/kr/-/asset_publisher/PR7UbfssNlmL/content/id/3467396 (검색일: 27.01.2019).

17) Statement on "North Korea: Four Party Peace Talks". June 30, 1997 // U.S. Department of State. URL: <https://1997-2001.state.gov/>

과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북한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기조를 생각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매개 변수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

에 러시아의 국익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번역: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statements/970630.html](https://www.korea.net/pressroom/pressroom.do?menu=11&subMenu=1101&contentSeq=970630) (검색일: 29.01.2019).

- 올레그 다비도프(A.V. Romanov) (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блемы и пути развития
- 출처 :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저널 2019년, 제6호.

한반도 상황의 변화 가능성

올레그 다비도프

올해 초부터 한반도에서 정치적 상황, 특히 군사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북한은 자국의 정책에서 중대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중지하고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화해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자 사태는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들은 오랜 세월 존재했던 군사·정치적 대결을 멀리하고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미국 및 남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다자간 회담을 가능케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좀 더 평화로운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

최근 성사된 회담과 접촉의 결과를 보면 현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 북한과 남한은 인도주의적 협력과 무역·경제 협력을 재개하고, 정전 협정을 대신해서 향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극단적 대립을 상호 지양하는 노력을 보이

고 있다. 남북한이 체결한 군사 분야의 합의는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추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고 있다. 통신과 교류 분야에서 정부채널과 군사채널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재건하여 이후 남한의 교통망과 연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역사상 전례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여기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다.

결과는 적지 않을 뿐더러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도 많다. 그러나 현재 협상과정에서 일련의 합의안들이 ‘지체되고’ 후속 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않아 북한을 포함하여 남한이나 미국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합의 사항들을 실제 적용하는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하고, 기본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

애물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모든 노력이나 조치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 대표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한 의견을 따져서 양측의 입장을 분석해 보는 것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핵 프로그램 중지에 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며 비핵화 과제 이행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평에서 북한은 ‘한반도 핵무기 자유지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입장에서부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암묵적 표현일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자국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문제에 진전이 없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장 해체,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군인 유해의 미국 측 양도 등 ‘건설적 행보’의 측면에서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미국은 남한 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고’ 순차적으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등 일련의 장기적이고 건설적 조치들을 취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측이 상응하는 행보들을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폐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자신이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자신의 약속을 신뢰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직접 또는 남한 정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김정은과 두 번째 회담을 갖겠다고 말하면서 이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불화를 제거하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화해 제스처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이나 나아가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경험 많은 신중론자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을 이미 오래 전에 버렸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받아내고 제한된 핵 잠재력을 보존할 수 있는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전략 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미국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회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 수준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따라서 남한에서도 계획된 군사훈련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군 수뇌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북한과 전면적 접촉과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남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확고한 선린 관계는 군사적 위협과 우연한 무장충돌의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단기간에 남북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들은 미국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혔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심과제는 비핵화이며 북한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너스는 그 다음이며, 그것도 비핵화가 성공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결국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 때문에 여러 영역에 걸친 남북한 협력사업 합의사항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이 화해노선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서울답방 문제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답방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나 정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회담은 당사국들 간에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사국들 중 한 측도 ‘문을 두드려서’ 대화 과정에 나서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점은 기존의 합의를 거부하게 만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키운다.

합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시간을 멈추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계속 연기되고 문제 상황을 타파할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붙고 있는 ‘해빙’의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번역 :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Возможные Переме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저널 2019년, 제6호.

검열, 러시아 권위주의의 표상

김용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사회의 생존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배제된 인간 활동을 상상할 수 없으며 인류 역사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관계의 조건을 결정해주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정한 시대,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흐름, 그리고 내용은 곧 그 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인간관계의 내용을 대변해 준다. 커뮤니케이션은 시대의 총체적 반영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는 사회전반을 순환하는 정보의 흐름인 커뮤니케이션을 ‘검열’을 통해 조절한다. ‘검열’은 삶의 양상 이면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의 생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은 그 본질상 자유를 추구하지만, 권력은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 이 틈새에서 우리는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문화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해체와 더불어 탄생한 러시아는 탈사회주의적 체제변혁의 과정에서 경제위기, 체첸사태를 비롯한 대내외분쟁, 정권교체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세계화라는 국제체제 속에 새로운 특성과 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한 러시아 건설’의 국가목표 아래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시한 푸틴 정부 이후의 현실은 러시아가 지향하는 체제변혁의 궁극적 목표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유발시켰다.

푸틴 집권기를 규정하는 ‘신절대주의’나 ‘권위주의’적 특성은 러시아 대내외정책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표출되었으며, 특히,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통제정책’은 이러한 경향의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2000년 러시아 최대 민간 언론기관이었던 미디어모스트 그룹의 해체, 2002년 연방보안부(ФСБ)에 의해 벌여졌던 주간신문 <베르시아(Версия)>에 대한 압수수색, 언론 통제를 강화한 법 개정, 폴 흘레브니코프

1)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원론』 (서울: 범우사, 1999), p. 22.

(Пол Хлебников), 안나 폴릿콥스카야(Анна Политковская), 이반 사프로노프(Иван Сафронов) 등 잇따른 언론관련 종사자들의 피살사건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적 사회통제’는 러시아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기지속의 문제이다. 그것은 15세기 이반 3세 이래로 확립된 전체적인 러시아 국가정체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다. ‘신의 섭정’으로서 최고통치자의 권위가 법제 위에 군림했던 시대에 기존 체제에 대한 여하한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 차단됐다. 검열은 강력한 왕권 유지라는 전체정의 속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무기였다.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검열은 알렉산드르 1세 통치기에 제정된 ‘1804년 검열법’을 근간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을 토대로 조성된 검열체계가 큰 틀에서 혁명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니콜라이 1세의 ‘1826년 검열법,’ ‘1828년 검열법,’ 알렉산드르 2세의 ‘1862년 임시검열법,’ ‘1865년 임시검열법,’ 알렉산드르 3세의 ‘1882년 임시법,’ 니콜라이 2세의 ‘1905년 임시법’ 등을 통해 검열기관의 체계와 구성, 검열의 기준과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의 국가검열체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정보의 통제를 통해 전체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정부는 국가발전의 진로 또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화 와 이를 위한 국민교육 향상, 그리고 농노제와 정교를 기반으로 한 전체체제 수호 사이의 간극은 러시아 통치 권력의 딜레마였다. 이처럼 양극단의 가치 사이에서 개혁과 반동이 교차했던 검열정책은 시대에 따라 그 기준과 방식에 있어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기존 국가체제의 유지라는 근원적인 지향점은 동일했다. 궁극적으로 제정러시아의 검열은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상의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검열은 무지한 대중에게 이성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계몽 세력과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치·종교적 수구 세력 간의 불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푸틴 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가주도의 정보 통제 행보는 과거 제정러시아 시기 검열의 역사 속에서 묘한 기시감(既視感)을 갖게 만든다. 특히, 얼마 전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가 채택한 이른바 ‘가짜 뉴스(фейковые новости)법’은 그 기시감을 더욱 또렷하게 한다. 지난 2019년 3월 7일 채택된 법안은 행정법 20조 1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 국가, 러시아연방 공식상징물, 러시아연방헌법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불경(явное неуважение)을 무례한 형태로 표현한 정보의 온라인상 유포”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만에서 10만 루블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20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15일 간의 구류형이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 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0~30만 루블의 벌금이나 15일 이하 구류형에 처해진다. 2019년 3월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원화로 약 51만원에서 510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이다. ‘명백한 불경’이 포함된 정보는 삭제된다. 이 정보를 게재한 사이트의 소유자는 위법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는 강제 차단된다.²⁾

2) Россияне уже придумали как обходить «закон по борьбе с фейками». <https://og.ru/society/2019/03/08/102773> ;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штрафах и блокировках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фейковых новостей. <https://www.business-gazeta.ru/news/416057>

러시아연방대통령 직속 시민사회발전 및 인권위원회(Совет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위원인 일리야 샤블린스키(Илья Шаблинский) 교수는 러시아관 <미국의 목소리> 논평에서 “위원회가 새 법안에 대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논거로서 “첫째, 법안은 넓은 범위에서 ‘정부에 대한 불경’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고, 둘째, 그것은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는 정보 표현의 모욕적 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리커처와 만화, 농담 등은 그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궁극적으로 이 법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가에 있다. 샤블린스키는 정부 당국과 관리들이 이 법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또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게 될 집단으로 파악한다. 이는 헌법상 ‘예외 없는 평등’ 조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샤블린스키는 이와 관련해 유럽의 판례를 기초로 한 러시아 대법원의 평결을 상기시킨다. “대법원은 국가공직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권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공직자들에 대해 시민들은 신랄한 비판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주장들이 더 필요한가?” 새 법안은 ‘비판의 영역 밖에 있고자 하는 집단’이 사회 내부에 축적된 분노의 분출 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스스로

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의 발레리 보르세프(Валерий Борщев) 공동 의장은 새 법안을 당국의 ‘히스테리(истерика)’로 간주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법안은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산물이다. 보르세프는 채택된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새 법안은 비판을 몹시도 두려워한다. 법안은 벌금을 20배나 증액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히스테릭한 결정이다. 법안 채택 과정에서 그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고려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협박하고 선전포고하려는 욕구 외에는 이런 역겨운 문건의 등장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법의 도입으로 다수의 기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르세프는 확신하고 있다. 그는 “현 정부는 이 법의 시행 초기에 ‘새로운 몽둥이(новая дубина)’를 사용할 명분을 찾는데 몰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이유들을 수없이 발견할 것이다. 이 법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법 조항의 표현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부 비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안보 등에 대한 위협으로 몰 수 있다. 러시아 법 집행의 이런 진부함과 특이성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보르세프는 “이 법안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고무줄 법(резиновый закон)’이며 억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한다.³⁾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의 업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 익숙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 궁극적으로 이 법안

3)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ы о штрафах за фейковые новости и за явное неуважение к власти 07 Мар 2019
<https://mhg.ru/news/gosduma-prinyala-zakony-o-shtrafah-za-feykovyie-novosti-i-za-yavnoe-neuvazhenie-k-vlasti>

의 목적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온라인상 다수의 공식 등록 매체들이 이 법의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매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체 검열’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 통제 문제, 즉 ‘검열의 문제’는 러시아의 체제변혁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현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역사의 주요 지점에서 반복되었던 현상이다. 전제 정치 하에서 국가 통치의 기조는 군주와 그 측근의 성향,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연동한다. 통치 권력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제로서 검열은 이러한 조건들과 긴밀히 조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푸틴 정부 하의 검열 양상에서도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국정 전반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표상한다.

근자에 논란을 일으켰던 ‘어산지(Assange) 사건’이나 중국을 위시한 다수 국가에서 진행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는 현실의 우리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검열’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한다. 특히, 언론 개혁의 문제나 ‘https’ 접속 차단 논란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 통제’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검열을 호명해 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성찰을 위한 것이다.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의 형태와 권력 체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

와 그에 대한 인식의 틀도 규정해 왔다.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보편적 시민권의 획득과정과 이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역할은 정합성을 가진다. 전통과 관습, 법과 권위를 기제로 한 권력의 끊임없는 세뇌와 폭력은 인간 존재의 가치와 현실 모순에 대한 자각을 차단하는 굴레로 작용한다. 권력에 의한 정보 독점과 편향된 정보 제공은 그 굴레를 더욱 공고히 한다. 언론출판의 가치는 무지와 무감각의 일상성에 빛을 던져 그 굴레를 벗기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검열이 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검열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사회적 현상들 중 하나인 ‘검열’은 사회, 정치,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현대문명을 지탱해온 보루로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우리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검열은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는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위적인 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게 할 뿐이다.”⁵⁾ 러시아의 비평가 앙겔가르트가 밝힌 바처럼 ‘표현의 자유’는 자연권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 김용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경상대 강사

4) 주명철, 『지옥에 간 작가들』 (서울: 소나무, 1998), p. 218.

5) Н. А. Энгельгардт,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в связи с развитием печати(1703-1903)*. СПб., 1904. с. 3.

2019년 초, 북한의 첫 번째 외교 행보

올레그 다비도프

2019년 1월 7일부터 열흘에 걸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이뤄졌다. 양국은 방문 하루 전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번 만남은 김정은의 네 번째 나 홀로 '방문'이다. 참고로 지난 세 차례의 방문은 작년에 이뤄졌고,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는 대외정치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남북 화해와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물론 작년에 몇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테마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북한의 의무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수많은 공동 문건에 명시돼있으나, 이는 공동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후속 조치의 순서를 둘러싼 북미 간 근본적인 이견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 대한 대가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 미국이 기존에

도입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이 양국 관계의 개선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고집했으며, 그런 후에만 양국은 큰 보너스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은 드라마틱하게 교차로에서 막혔다. 실무 접촉은 지속되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다. 양국이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다가올 회담에서 돌파구적인 합의가 달성될지는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다.

더욱이 김정은은 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는 비핵화와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와 동시에 미국이 지속해서 대북 강경책 및 제재를 고수할 경우,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단순치 않은, 그리고 뒤엉켰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가 또다시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에 도움과 조언을 구한 사실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다. 김정은은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지도부 간부들로 구성된 초강력 수행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다. 수행단은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통일전선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등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통상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다.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는 양국의 친정부 성향 언론인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이 매우 우회적 표현으로 절제된 보도를 한 것이 전부다. 얼핏 보면 이런 보도는 매우 과장된 기조로 보이며, 이는 양국 간, 양국 공산당 간 긴밀하고 수준 높은 관계와 광범위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 같다.

특히 신화통신의 보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결의를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강화 및 비핵화 진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긍정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 및 한국과의 평화 회담 발전과 관계 심화를 지향하는 북한의 행보를 지지했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상대국을 향해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가 표명됐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들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역할은 모두에게 있어 분명하다"는

김정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입증해야 할 것 같은 풍부하고 확연한 중국의 온정적 발언은 양국이 실질적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합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보도 자료에는 정전 협정을 대신할 한반도 평화 조약이나 대북 제재 해제, 비핵화 시 대북 안보 보장책 마련과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사실상 없다. 중국의 구체적인 물자 지원 제공 가능성에 대한 표현도 전무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보장해줄만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국에 전혀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회담 결과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미국의 회담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도, 미국에도 특별한 파트너 역할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했음이 틀림없다. 이런 모든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현재 중국은 중미 정치 회담 의제에 '북한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의도이며, 미국이 대북 요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살짝 압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공조가 온전하고 무조건적일 수 없다. 북한 체제가 때 이른 붕괴를 맞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군사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별다른 의무 없이 보수적으로 입장에서 지지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단지 중국이 문제가 있는 이웃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미국과의 글로벌 관

계를 희생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목전에 다가온 또 다른 현안으로는 조만간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며, 중국은 회담 성사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수많은 '걸림돌'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작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정치의 게임 체인저로서 전반적인 성공을 거뒀다면, 제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큰 성과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성과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비핵화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불안정한 입장은 미국 정계에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김정은과 정치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내 영향력 있는 기득권 세력 중 대다수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야욕 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북한과의 '불장난'이 성공을 거둘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방중 이후, 그리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단계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평화 회담에 전념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인내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지속되는 뿌리 깊은 이견으로 인해 현재의 교착 상태는 잠재적으로 양국이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이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 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Начало 2019 года : ПЕРВЫ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ход Пхеньяна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9.02.16)

러·일 정상회담 평가

비탈리 슈빅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모습에 본질적 변화도, 센세이션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사실 이번 회담과 그 이후의 공개, 비공개 활동을 고려한다면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러·일 정상회담은 특별한 기대도, 양국의 과대한 성명도 수반되지 않는, 매우 일상적인 사건이 됐다. 이번 경우도 그러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특히, 이전에 남쿠릴열도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그곳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곳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그리고 양국 정보국 교섭 유지), 평화조약 협상이라는 정치적 안건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양측은 교섭을 지속하겠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러시아 대통령, 일본 총리 모두 예상되는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도, 협상 범위도, 협상이 진척을 이루었는지 여부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주변의 설명을 통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일본 측이 협상 과정을 무척이나 서두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촉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담에 관한 양국 정치인들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론과 TV, 그리고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이 권력 계급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견해를 반영하는 발언의 특성, 그리고 그 발언에서 나타나는 최근 사건의 설명에 대한 어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토 분쟁 관련된 가능한 해결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의 일부분을 러시아가 양도하는 것은 이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양국 협상에서 양측 모두 자국에 유리하도록 자주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융통성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경우에도, 일본의 통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암시하는 협약은 가시적인 미래에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은 그 내용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공허한 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정치 엘리트들은

양국 관계의 공식 외교문서에 이 문제를 명시하는 것이(수년 동안 일본 측이 요구했던) 어떤 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보고 있고, 도덕적, 역사적, 또는 경제적 성격이 포함된 모든 논거는 사회 전체의 자각도, 양국의 지정학적 좌표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은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어쨌든 양측 모두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은 단순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영토 문제에 대한 상충된 견해를 고려해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하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보 교환 채널은 유지되지만, 해결책 산출은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선택은 동일하다. 즉 본질적으로는 시간과 세대교체만이 73년 전에 상실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에 러시아 대외정책을 결정할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존재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러시아에 유익한 정치인들이 미미하고 그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 없이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협약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앞에서 모든 개인적 접촉과 관계는 가장 높은 고위급 정치에서조차 의미 없다.

어쨌든 러·일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어려운 문제는 마법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정치회담의 과정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 지도자가 선언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lsy@hanmail.net

· 비탈리 슈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О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ой встрече в верхах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9.01.24)

2019년 아태지역 진단

비탈리 슈비코,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예브게니 카나예프

2019년 아태지역 국가들은 국제 안보와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굵직한 매듭으로 남아 글로벌 정치·경제 기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국내 상황, 그리고 그와 직결된 사건들이 아태지역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국내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적 한계와 금융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전쟁 형태를 띤 대미(對美) 관계 악화와 투자 여건 악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기업들의 무역 확대와 투자활동, 중국의 국가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점차 커져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발전이 위협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조치와 위협은 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 첨단기술 경제 분야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동원해 중국 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급자족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는 경제 분야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이 아태지역의 산업과 무역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역내 국가들 간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다.

2019년 중국의 핵심적인 정치 문제는 정부관리 및 국영기업 관리체계의 개혁이 될 것이다. 반부패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언론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내외 도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 안정성과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정부의 능력과 국가 권력의 효율성이 제1순위로 대두된다.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글로벌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적 및 글로벌 신냉전 현실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 대미 관계의 악화가 반영될 것이다. ‘자력갱생’ 경제 구호를 내세우고, 많은 경제 부분에서 비정부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 거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분야에서 정

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선전이 강화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국유화하기에 이를 수도 있다. 사회에서는 전면적인 '정부의 공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것은 민간 사업부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차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대외 개방성 확대와 경제 개혁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다.

2019년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미국과 공동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낮아질 것이다.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관심의 초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수호 작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중국의 통제 하에 있는 산호초와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긴장은 양국의 군함이 동원되는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안 모색, 수출 시장 다변화, 중국의 경제적 팽창의 주요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일대일로' 사업 시행에 중국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대외관계 다변화를 위해 EU, 러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 동맹국인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과 새로운 자유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

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인프라 시설을 중국 기업이 통제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이와 병행해 이 국가들에 중국군의 주둔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수혜국의 국가 산업·경제 전략과 중국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고, 기술 및 재정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경제·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더 긴밀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다. 제재 하에 있는 러시아의 기업이나 개인과 협력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 미국이 2차적 제재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일본 정치는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되며 상징적인 사건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헌법의 일부 규정을 재검토하는 작업, 즉 선거제도(선거구) 개정,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권력 기관의 권한에 대한 개정, 일본의 전력(戰力) 창설과 이용을 제한하는 헌법 제9조 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걸음은 집권당 대표가 헌법 제9조 개정안을 논의에 붙이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은 법 개정 논의에 제동을 걸 것이다. 연립내각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작년에 자민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도 일본의 주류 정치세력 내에서도 그의 입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는 않다. 아

베 총리가 제시한 국가 전력(戰力) '정상화' 개념에 따르면 일본 및 일본의 안보 이해관계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에 일본 병력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일본 정계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제안은 '자위대' 존재 사실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일본의 대외정책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방면에서 외교의 적극성이 높아질 것이다. 2019년 1월로 예정된 미·일 무역협상이 양국 관계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미국 내 일본 기업의 활동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미·일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일정부분 양보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산 무기와 군사기술 구입 확대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이미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밝혔다.

대중(對中) 관계에서는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베이징 방문 이후 정치 기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고위급 대화에서 동중국해의 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위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전체적인 전략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중국과 분쟁중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러시아와 영토분쟁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인 입장을 완화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정치적 접촉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도서들의 입지가 양국에 극도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대외 상황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러 경제 관계는 세계적인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일부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2019년이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해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실험에 직면해 있다. 경제 부문에서 현 정부는 청년층(특히 고학력 청년층)과 '공무원'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는 미미하다. 생산 증가는 크지 않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 당국은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비관론으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동시에 대규모 경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야당과 경제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기업은 정부의 경제 개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에서 경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시작이 북한을 남한과의 통합으로 '끌어들이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로써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질서' 확립 개념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에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 체결 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노선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한국은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지역 경제 협력에 대한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주요 화두는 아마도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일 것이다. 미국 지배층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태도가 배가됐다. 양측 모두 자신은 약속을 이행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덕분에 대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 상호간의 요구와 기대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협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 그럴 경우 가장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는 상호간의 짜증과 불만이 점차 커지고 그 결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철회,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수사의 격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옵션 검토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도는 5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집권당인 인도인민당(‘바라티야 자나타당’)이 2014년의 대승을 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야당은 집권당이 행정 자원과 선전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민 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민족

주의적 분위기에서 노련한 게임을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당이 약속한 생산성 향상과 더 유연한 노동자원 활용을 위한 개혁의 실행 시점은 2020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인도는 세계의 모든 지역 중심 세력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해관계와 기대를 충족시킬 실제적인 행동은 뒤로 미루면서 그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유지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중(對中) 관계에서 인도는 자국이 개방경제 사상을 고수한다는 점을 내세워 중국산 상품과 중국 기업에 더 넓게 문을 개방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동시에 포괄적 지역경제 협력사업에서도,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과의 양자협력에서도 추가적인 의무를 지는 것에는 시간을 끌 것이다.

대미 관계에서는 현 정부가 자국의 군비강화 사업을 실시하는 데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의 군대 증강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제품과 의료기술을 비롯한 미국산 상품이 인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대체 무기공급원이 있다는 사실은 인도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인도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를 약속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집권 정부로서는 특히 중요하다.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뿌리 깊은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인도가 중국과 파키스탄 측의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총선 이후 파키스탄과의 교섭이 재개될 것이 예상된다. 오늘날 양국은 무

장 충돌로 과열되는 것을 피하는 적당한 선에서 양국 간의 긴장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2019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것이다. 이 국가들의 국내정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자간 대화의 장으로서 아세안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과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양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은 신산업혁명의 현실과 관련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무역 및 투자 교환 규정, 노동력 이주, 상품과 서비스가 가상화되고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과세 등의 메커니즘과 표준을 재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아세안은 경제적 구성요소인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아세안이 부딪히게 될 국제 안보상의 주요 위협요소는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이다. 이것은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8 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간 협력 포맷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약화시킬 것이다. IS의 전투원들이 중동을 떠나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침투함에 따라 아세안은 반테러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대리 관계에서 아세안은 안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세안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아태지역의 2019년 지역 협력 경향은 최근 2

년간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양자포맷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하위)지역적 성격의 프로젝트와 대화는 복잡해질 것이다. 아태지역의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은 다자간 지역사업의 틀 안에서 자국의 전략목표를 실현할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 지역 협력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 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역, 투자, 금융, 혁신 분야에서 지역적 차원의 새로운 양자관계 패러다임을 당분간은 설계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창의적으로 강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비즈니스에 일련의 수정을 가하여 중국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국내시장 접근을 자유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태지역 경제 발전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고 역내 국제관계의 기준을 부여하는 지역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은 역내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적 동맹을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개념은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도를 아태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는 모디 총리가 천명한 '동방정책(Act East)'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 지역 협력과 안보 체계 구축(우선 한반도, 그 다음 동북아의 '신질서' 확립)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아세안 국가

들은 '아세안 플러스(ASEAN+)', 즉 개별적 협상의 틀 내에서 역내의 모든 강대국과 상호 협력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대규모 다자간 지역 기구가 부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APEC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도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새로운 동인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포괄적 지역 경제협력은 2019년에 유효한 국제기구가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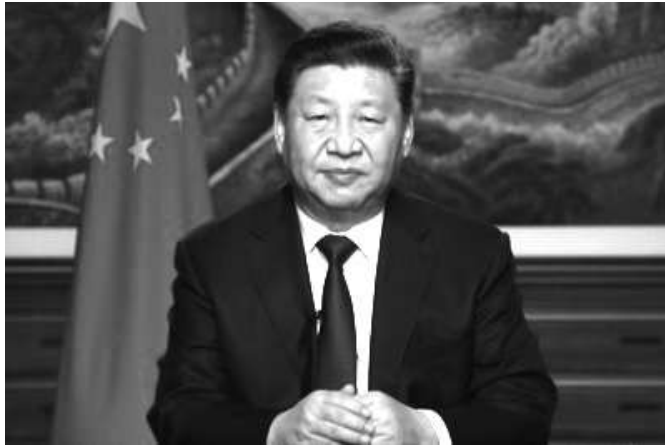
수 있다. 이것은 경제,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본격적인 참여 없이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비탈리 슈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 경제정치부장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 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ovskij)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예브게니 카나예프(E. A. Kanaev)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교수
- 원제 : ТИХООКЕАНСКАЯ АЗИЯ: прогноз на 2019 год
- 출처 :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저널 2019년, 제5호.

미·중 갈등의 양면성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used image from CGTN videotranslation // youtube.com

세계 언론들은 ‘무역마찰’로 표현했고, 이와 달리 중국 지도부는 한층 악화된 ‘무역분쟁’이라고 지칭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의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 사회·경제, 군사, 대외 정책 등 모든 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은 2018년 말 또다른 복잡한 전개 국면에 들어섰다. 즉, ASEAN, APEC 국가 및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국제적 대결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정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해를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대결, 중국의 현대적 무기 생산 증가,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 탐사 정책,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중국이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이자 창업자의 딸인 멩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등 유명인들에게도 불뚱이 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은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세 인상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삼가는 90일동안의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 기간 동안 미국측이 항의하고 있는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자본의 접근 용이성, 지적 재산권 보호,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기술 스파이로부터의(미국의 해석) 미국시장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초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연속적으로 열면서 양국 모두 경제대화해 집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미·중 무역갈등은 적어도 향후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이 어떠한 전술적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이익과의 '거래'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즉 주요 전략 방향인 군사력의 현대화, 남중국해 지배, 인도양에서의 입지 강화, 인권에 대한 고유의 해석, 대만과의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 대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2019년 양국간 새로운 갈등이 초래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예다.

동시에 경제분야에서는 '적절한 양보'를 감행할 생각이다. 일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500 여개 상품의 수입 관세를 낮춘데 이어 12월에는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항소법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의 '공식' 경제 전문가들은 양국이 90일 동안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국 군사관계의 경우, 현재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마찰' 상황에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중심 채널'로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미·중 국방부 장관 회의를 열었고, 12월 상해에서는 해양구조협력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양면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해상 활동 및 2018년 11월 발표한 현대적인 미사일-우주군을 창설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두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자국 군사독트린에 중국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적으로 명시했다. 게다가 2018년 말 미국이 대만과 양국 군사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중 관계에 긴장이 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 즉 미국 납세자와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일종의 주식 브로커 전략을 외교 정책으로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을 활용하여 미국 내 정치적 배당금의 '축소,' 즉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부분적 정상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국 내 위기를 모면한다.

단기적 전망에 관해서는, 중국과 미국 언론 모두 중도적인 낙관주의가 지배적이다. 90일간 양국은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 모종의' 거래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관적인 시각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Jack Ma)을 포함해 많은 중국 전문가와 대기업들은 현재 미·중 간의 대립이 관세 및 기타 경제적 분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보다 깊은 '체계적 성격을 띠며 더 증폭되기만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오래됐을 뿐 아니라 최근엔 거의 잊혀진 이론인 소위 '베이징 합의'(경제모델-시장경제, 정치모델-전체주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정치공학과'에 따르면, 세계는 글로벌 영향력을 두고 앵글로 색슨의 자본주의 모델과 중국 모델 사이에서 대립과 경쟁이 확장된다. 정치공학과들의 이 시나리오는 결코 양국의 전략적 합의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회의론자들도 중국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근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 2019년 1월 초, 중국은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 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국 부품 제조사에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미국 회사인 Tesla 회사에 광대한 전기차 생산부지를 제공했다.

미국과의 대립속에서도 중국은 2018년 중요한 이데올로기 선전 기회인 시장경제개혁 40주년 축하 행사를 열었다. 대미 관계 악화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당의 정치적이념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하 행사를 이용한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열린 축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당은 남, 북, 중앙 모두를 지배한다'는 덩샤오핑의 오랜 구호를 언급했다. 중국 선전국은 이를 시진핑의 독점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이용하는 한편,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불

평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마오쩌둥의 '정장'과 계획경제 사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으로 활용했다. 그 답이란 시장개혁 노선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중국은 시장개혁노선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초 시 주석은 중요 인사를 단행하여 1970년대에 출생한 젊은 관리들을 중앙 및 지방정부 차관급 직위에 발탁했다. 중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이라는 왕좌에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2022년 주석 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국가 통제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시 주석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재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무역분쟁'은 중국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8년 말 그와 같은 부정적 경향은 한층 강화됐다. 2018년 중국의 GDP는 6.5% 성장을 견지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중국 및 홍콩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GDP성장률이 0.1%에서 0.3%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다. 몇몇 미, 일, 한국의 연구자들도 곧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본다면 중국 중소기업의 대미 무역 환경 '악화' 과학 발전을 바탕으로 설정한 GDP 기대치의 0.2~0.3 포인트 하락, 그리고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특히 2018년 말 북경대학을 비롯한 중국의 대학생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마오 사상으로 회귀하자'

고 외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생존 능력'은 매우 강해 보인다. 중국의 금 보유고는 2018년 말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의 대 유럽 인프라 및 대형프로젝트 투자 계획 또한 선진국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중국자본의 미국 시장 확대 및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세에서 미국의 강력 제재정책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발전 잠재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의 대러 정책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대미 압박 수단으로서 '러시아 카드'를 계속해서 활용한다. 즉 중국은 대러 무역(2018년 양국 무역량 사상 최초 1,000억 달러 돌파) 및 군사 협력(무기 구매 및 일상적인 대규모 군사 훈련 실시)을 활성화하는 한편,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대외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대미 정책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에 대항할 동맹국으로 러시아를 찾으면서도 러시아로 인해 대미관계에 추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다.

특히 경제부분에서 중국 대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위협으로 러시아와의 사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은행과 기업가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 제재가 중국 파트너들의 회사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했다.

그러한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국영기업이 경우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민간 기업의 경우는 아마도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중국에서 민간 기업은 GDP의 60%, 고용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안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몇몇 러시아 및 중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의 제재' 하에 있어 이러한 점이 반미 동맹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러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를 풀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제재가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 수단인 관세조치다.

현재 대미 갈등상황에서 중국은 명확하고 선명한(기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함) 윤곽, 즉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대외정책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얼마나 배려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적어도 아래의 두가지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구체적인 답을 얻고자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의 '동방정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의 목표, 구체적 활동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러시아에게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또한 미국의 입지는 어떠한가?

둘째, 러시아는 실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원치 않는가? 현재 러시아는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공이 트럼프 손에 있다는 식의 답은 아마도 중

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Китай – США: две стороны одного противоборства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9.01.17)

중국 '일대일로'의 다중적 의미

세르게이 루코닌

경제개혁 40주년이 되는 2018년 중국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기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5주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 구상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언급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중국 대외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 당시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목표와 과제가 무엇인지, 일대일로 사업 전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이 모든 것이 2011년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아프가니스탄 경제발전계획 '신 실크로드'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 구상은 그 후 2~3년간 선명성을 띠지 못했다.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개최한 수많은 국

제회의에서 일대일로가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이라는 개발도상국의 견해에서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선진국의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국 발표자의 보고서에도 분명한 성격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시에는 구체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일대일로 사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없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 일레가 2015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어느 정도 이념적 완성도를 부여한 계기가 된 사건은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도 참석했다. 인도는 자국과 파키스탄이 분

쟁 중인 영토에서 중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포럼 참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일대일로 구상 5주년이 되는 2018년에 국제 회의가 개최되고, 일대일로 협력국가 주재 중국대사들과의 만남이 성사됐다. 그 밖에도 다양한 영역과 여러 국가들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행사들이 개최됐다.

일대일로 구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 다양한 행사와 토론이 진행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분석 자료가 충분히 나온 현 시점에서 “이것이 누구한테 득이 되는가?,” “이것에서 무엇이 얻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1. 왜 중국은 ‘일대일로’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조화로운 세계,’ ‘보편적 번영’ 등 중국의 전통적 일반 이념이 충분히 담긴 공식문서에서 벗어나 일대일로 구상이 등장하게 된 전제조건과 중국의 국내 경제적 요구를 독자적으로 밝혀보자.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첫째,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에는 내수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내수 위주의 모델로 옮겨가려는 중국 당국의 기본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중국 내 인프라 건설과 세계 시장에서 값싼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된 유리, 시멘트, 금속 등의 분야의 생산시

설들이 남아돌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2008~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하면서 유발됐다.

그 외에도 국가산업 현대화, 중국에서 개발·생산되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 확대,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 평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경제와 대외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단순한 처방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비판론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은 수출 총액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상쇄하지 못한다. 수출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특혜 차관과 같은 유형의 다양한 보조금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유휴 산업시설이 있는 산업부문의 기업을 폐쇄할 수는 없다. 이들 기업은 주민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원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이러한 기업을 일부 이용하고, 이것으로 지역 총생산의 증가를 촉진한다.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적극성을 보이면 그들 중 일부의 파산을 초래해 재정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안정성 확보가 2019년 중국 재정당국의 최우선순위로 선포됐다. 다른 한편으로 높은 부채 수준은 2008년에 시행된 인프라 건설과 같이 정기적인 국책사업으로 경제발전의 속도를 떠받치는 중국 정부의 가능성을 제한한다(실제로, 규모로는 2008년보다 작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이 2018년에 시작됐다).

이론적으로 일대일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인들을 형성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불균형과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다.

- 첫째는 중국 내 유희 생산시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창출, 둘째는 국책사업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되는 전략 부문들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중국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추가적 수요 창출이다. 이것은 중국 경제 현대화 속도를 높이는 데 추가적인 동인을 부여할 것이다.
- 중국 비즈니스 확대 계획 '밖에서 출구 찾기'를 계속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동인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일대일로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국영 대기업, 그 다음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토를 마련하는 것이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간수성 등 중국 내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 서부지역 개발, 동북지역의 낙후 산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발전 계획과 같은 지역 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데 일대일로 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개발 계획의 목표는 중국 내 경제발전 수준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자원집약형 산업을 중국 동부지역에서 북부와 서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든 개발 계획의 기본이다. 이로부터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웃 국가들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로를 구축할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 촉진과 경제 현대화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전략 목표다. 이것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교통로 구축 및 현대화와 그 교통로를 따라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육상 교통로(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을 경유하여 계획되고 있다. 해상 교통로(해상 실크로드)는 태평양, 인도양, 지중해를 경유하는 전통적인 해상 무역로다.

경제성장의 거점을 만드는 방법은 자본집약도와 정치·경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위의 지역들에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국의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로 중국의 설비와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에 의해 시행된다. 자금 조달은 중국 금융기관에 의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이것은 중국 내 유희 산업시설을 가동하고 첨단기술 상품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동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선봉이 자본집약적, 자원집약적, 기술집약적인 고속철도 부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 '일대일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

일대일로의에 대한 진단은 한편으로는 간단하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일대일로 사업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에서 중국 기업에 의해 사업이 시행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 사업은 투자액이 약 6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다. 둘째, 시간적, 지리적, 그 밖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 사실상 일대일로는 브랜드이다. 이 브랜드 내에서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대일로를 진단하기가 어렵다. 2017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EU의 반발이 일대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일대일로 사업을 제한적으로 실현하더라도 세계경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희 생산시설을 추가로 가동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유희 생산시설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DP 증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유라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교통로와 산업기지 건설을 통해 재산업화를 추진하고 국내의 지역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효율화 기술, 서비스 부문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동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중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과 EU의 반발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지역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국제금융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지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어떤 수정을 가함으로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복지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대결구도가 일대일로 실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3. 왜 모두가 일대일로를 좋아하지는 않는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모든 국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왜일까?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비용과 자원으로 경제복지 창출을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례를 든다면, IMF는 일대일로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 ‘부채의 덫’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마도 중국은 이 국가들이 중국 부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국가들을 중국의 속국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른바 중국의 ‘부채 외교’이다.

특히 서방의 대중매체는 중국의 신식민지 정책을 의심하는 많은 기사들을 쏟아냈다. 현재는 그 대상이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지만 그 다음 순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정책이 EU의 단합을 해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중국 주재 EU 28개국 대사들 중 헝가리를 제외한 27개국의 대사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비판하는 공식서한에 서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동결된다. 몰디브는 중국 금융기관에 15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이 중국 기업에 양도되

고, 소유권이 일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다. 시에라리온은 중국 자본으로 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에 의해 중국의 돈으로 시행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사업에 대해 향후 20년간 40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대일로 사업에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차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중국 차관은 평균 이율이 연 5~6%이나 국제은행들이 발행하는 차관은 2~3%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은 재정 투명성과 경제적 및 기술적 안정성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 사업 시행에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력만 참여한다.

최근 2~3년간 주로 서방의 싱크탱크들이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C4ADS 보고서,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보고서, 독일무역투자진흥청이 독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낸 보고서 등이 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중매체와 연구자들도 의견을 보탤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빼면 모든 언론 보도와 분석 보고서의 주된 기조는 두 가지이다.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중국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사업이 해당 지역의 기업과 노동력에 대해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4. '일대일로'에 대한 변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비판에는 반대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중국의 '부채 외교'라는 용어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2018년 5월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이 용어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연구원 샘 파커가 작성한 미국 의회 보고서에 사용됐다.

중국 '부채 외교'의 '상징'인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일대일로가 등장하기 오래 전인 2008년에 이미 건설되기 시작했다. 주 시공사는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과 중국수력공사(Sinohydro Corporation)였다. 항구 건설 자금의 85%가 중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으로 조달됐다. 항구는 2010년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수입이 예상을 밑돌았다.

이러한 상황에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상인항구지주회사(China Merchants Port Holdings Company)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중국상인항구지주회사가 함반토타 항 운영 회사의 지분 70%를 갖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 측이 항구 개발에 추가로 6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부채 외교'의 또 다른 예로 알려진 것은 필리핀에서 두 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 건설 사업은 중국의 차관이 아니라 중국의 증여로 수행될 것이다. 즉,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필리핀 국가 소유로 남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의 신식민지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첫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채권자는 서방의 금융기관들이다. 중국은 지부티, 콩고, 잠비아의 주 채권국이다. 둘째, 쉘러 연구소(Schiller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아

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주로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농업에 집중되고, 투자총액도 유용광물 채굴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미국과 유럽의 투자액보다 훨씬 적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기업이 중국 자본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 개의 사업(철도, 송유관, 가스관 건설)이 동결된 것은 중국의 팽창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뇌물 수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개발유한회사(Malaysia Development Berhad) 펀드에서 45억 달러가 사라졌다. 펀드는 2009년에 설립됐고 말레이시아 측에서 계약에 참여했다. 언론에 따르면 7억 달러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전(前) 총리가 펀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중국의 기업과 자본이 참여한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이 10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주 채권자는 중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들이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2019년 파키스탄의 부채 총액은 9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부채 관리비용이 2022~2023년까지 약 3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대(對) 중국 부채 상환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8년 말에야 시작되고 수치는 8천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윌리엄 앤 매리 대학교(College of William & Mary)의 연구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의 사업에 비해 중국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 지역경제의 발전 수준 평준화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다. 게다가 일대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 사업과 국가 경제발전 속도 증가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관측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논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어떤 공인도 일대일로 사업이 자선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일대일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공짜로 참여할 수는 없다. 게임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런 저런 사업 시행의 가능성과 위기를 면밀히 검토할 문제이다.

둘째, 중국이 신식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은 과장돼 있다.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받아야 공정하다. 서방 국가들의 투자가 채굴산업 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부채 외교'의 규모 역시 과장돼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리고 파키스탄의 주 채권자는 국제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 금융기관들과 달리 중국은 스리랑카의 경제 개방, 루피화 환율 자유화, 정치개혁 실시 등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

넷째, 철학적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어느 편이 더 나은가? 중국 기업들이 어떤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독자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할 기술적 능력도 재정적 능력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국제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자금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스리랑카는 일본, 인도, IMF,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함반토타 항구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왔다. 그러나 인권침해

(수년에 걸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분리주의 운동 간의 내전)와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거부당했다.

다섯째, 중국과 미국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자국 기업이 시공을 맡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과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신 실크로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아프가니스탄 기업이 건설을 맡게 될까?

여섯째,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의 경우(현재로서는 다른 예가 없다) 중국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값비싼 사기를 쳤다고 믿기는 어렵다. 중국 당국이 함반토타 항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도 항구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스리랑카 정부를 설득하여 차관을 제공하고, 항구가 비효율적임을 확신하고도 중국 기업이 12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항구 개발에 6억 달러를 더 투입하기로 약정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받아냈다고 믿기는 어렵다. 세기의 거래라... 반부패 캠페인과 해외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는 마당에 베이징에서 중국상인항구지주회사의 운영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일곱째,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비판이 활발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및 동맹국들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를 저지하고 그것과 경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를 슬며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간 비공식 전략대화(QUAD)를 활성화하고 아태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체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

ment Finance Corporation)는 인프라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6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역내에서 미국의 기술을 진전시키는 데에 2,500만 달러를 별도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호주의 수출금융보험공사(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는 아태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5.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내의 인식

물론 일대일로는 다른 모든 대규모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점이 없지 않다. 일대일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2018년 4월 광저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리뤄구 전(前) 중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여기에는 민간 투자도 포함된다. "국가의 평균 부채 비율 권장치는 GDP의 20~100%이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GDP의 35~126%에 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2018년 6월 중국 국가회의 산하 연구개발센터 왕위민 부원장은 일대일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금융기관들(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브릭스 개발은행, 중국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실크로드 기금)이 있지만, 재정 적자가 대략 연간 5천 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 밖에도 중국 내에서도 국내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징진지 프로젝트’(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을 초거대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 주장강 삼각주 개발(홍콩, 마카오, 선전, 광저우 등), 양쯔강 삼각주 개발 등의 사업에 연간 약 1조가 소요될 수 있다.

저우 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신임총재는 일대일로 사업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투자원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기관들, 주 채권자들, 금융센터들(홍콩과 영국)과 교섭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민간 투자자와 민간 자금조달 채널의 제한적인 참여, 낮은 수익성, 일대일로 참가국의 복잡한 금융제도와 관련된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이다.

6.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일대일로 사업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점을 고려해 중국 당국은 반발을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참가국을 ‘부채의 덩어리’에 빠뜨린다는 비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0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빈국들의 대출과 차관 부채를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환경표준과 안전기술 표준을 위반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이미 2014년에 중국 상무부가 ‘채굴산업 분야 해외투자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여기서 안전기술과 노동법 분야의 국가표준과 비즈니스 시행, 인권 준수에 관한 유엔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기술 절취에 대한 비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저작권 준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중국 기업이 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불한 사용료와 특허 수수료 총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지불한 액수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IMF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술 보유권에 대한 지불액 순위에서 중국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인도를 상당히 앞지르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재정 불투명성, 사업 시행을 위한 자원 부족,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각 사업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투자자들을 위한 일반적 특별 제도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기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적인 성격이 약해질 것이다. 참가국들의 이해가 더 많이 고려되고, 참가국의 설비 공급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수익이 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경쟁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중국 자본의 비용절감을 초래

할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세계적 업무실습 기회가 될 것이다(개방성, 사회적 책임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의 대체 자금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그들 간의 경쟁으로 차관 발행 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더 유리한 자금조달 조건,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법 준수, 국내 설비공급자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이것은 중국, 미국, 일본, 또는 그 밖의 세계 경제 주체들 중 어떤 국가와 교섭을 진행하는가와 관계없이 참가국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Неоднозначность китай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Один пояс - один путь'
- 출처 : «Эксперт» (2019.01.20)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의 멀티 벡터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본 논문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일어난 중미 ‘무역전쟁’의 주요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외 정치에 대한 중미 ‘무역전쟁’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개별 특성 및 양국 ‘군사 행위’의 전술과 시기를 구분한다. 또한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방어 행위의 주요 방향이 연구되며 미국의 ‘무역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전망’이 분석된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결은 중국의 사상 및 정치, 사회 경제와 군사 발전의 모든 측면에, 그리고 대외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무역 대결을 세계 언론에서는 ‘무역 전쟁’으로, 중국 지도부에서는 더 부드럽게 ‘무역 마찰’로 부르고 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양국 간 무역 대결은 새로운 복잡한 발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아세안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대결의 국제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결 무대는 확장되고 있다. 사실 대결은 이미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영역이기도 하다. 사건

의 중심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중국의 현대적 무기 생산 강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 탐사 정책, 유럽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최대한으로 가능한 국가들과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강화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재무 책임자이자 창업주의 딸과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타격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는 90일 간의 일종의 ‘휴전’에 합의하였으며, 그 동안 양국은 무역 관세 인상 및 다른 제한 조치들을 자제하였다. 이 기간 중국과 미

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타협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 자본의 더 손쉬운 중국 시장 유입 보장,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미국 측 해석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기술 스파이로부터 미국 시장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다. 2019년 초 중국과 미국 정부는 일련의 고위급 대표자 회담을 조직하여 경제 대화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무역 대결이라는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행동 전술이 나타났다. 중국 측에게 이 무역 대결은 경제적 타협에 대한 준비이자 기본 사상 및 정치적 이익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의 준비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군사력 현대화 권리,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서의 주도권, 인권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권 등 주요 전술 방향에 의한 자국 입장의 경직성과 비타협성을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군사력 강화와 전쟁 준비'라는 시진핑의 호소로 중국 정부가 2019년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보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1일부터 중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1,500개 이상 제품의 수입 관세를 낮췄다. 2018년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응답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상고 법원을 만들었다. 중국의 '공식' 경제학자들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양국 간 군사 관계가 더

욱더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적 차원에서 해당 분야를 '무역 마찰'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주요 채널'로 해석하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친 중국과 미국 국방 장관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는 상하이에서 해상 구조 협력에 대한 양국 공동 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 측 입장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해상 군사 활동 및 2018년 11월 중국 정부가 밝힌 현대적인 로켓 우주군 창설이라는 오만한 계획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군사적 주목적'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2018년 말 미국-대만 군사 관계 활성화가 이러한 관계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는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 정부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미국의 이익인 '미국 납세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에서만 그러하다. 트럼프는 이를 국내 정책으로 활용하며, 일종의 주식 브로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침체화하고 이것으로부터 국내 정치에서 이익을 '취하고', 이후 일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며 다시 그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와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 언론에서는 적당한 낙관주의가 우세하다. 결국 양측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더 회의적인 평가 전망도 나타난다. 일련의 중국 전문가들과 대기업 회장들, 그중 세계 제일의 백만장자 중 하나인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중국과 미국 간 지금의 적대 관

계가 세울 및 다른 경제적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적대 관계는 더 심원하고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이른바 ‘중국식 합의’라는 이론 창시자들의 개념적 요구(경제는 시장 경제를, 정치는 권위주의를)를 반복하고 있는 이 정치학적 학과 대표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앵글로 색슨적 모델과 중국 간의 국제적 영향력을 위한 대결과 경쟁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 창시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합의를 기대하게 하지 않는다.

미국 내 상황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결코 미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원칙적 양보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와 함께 양국의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결부된 양국 관계 악화의 객관적 한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예는 2019년 1월 초 중국이 미국 기업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상하이의 대규모 생산 지역을 허용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 복합기업들의 참여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장기적 관심사를 고려한 것이다.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2018년 중요한 사상 및 선전 행위도 일어났다. 12월 중국 시장 경제 도입 40주년의 성대한 기념식이 그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당의 정치 및 사상적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이 호기를 이용했다.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기념 연설에서 최근 들어 처음으로 ‘당은 모든 것을 이끈다. 남도, 북도, 중

양도...’ 등의 마오쩌둥의 옛 명제를 반복했다. 중국 선전기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시진핑의 권력 독점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조건’ 속에서 미국와의 ‘무역 마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바탕으로 평등과 주도 경제라는 마오쩌둥주의자 사상으로 회귀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되었다. 시장 경제를 지속하려는 중국 공산당 방침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서 중국은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시 주석은 자신이 주도하는 미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초 그는 차관 및 지방 부지도자 수준의 주도적 위치에 1970년대 출생한 젊은 간부들을 등용하며, 일련의 주요 간부 개각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시 주석이 그에게 신세를 지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충실한 간부들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들은 시 주석이 2022년 중국 중앙공산당 주석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당과 국가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되, 그 직을 유지 시에는 훨씬 더 존중받는 중국 국가 주석이 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무역 마찰’의 영향은 2018년 말 마이너스 증가 경향과 함께 다소 부정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2018년 중국 GDP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기록을 거의 달성하며, 6.6% 착실하게 성장했다. 동시에 중국 및 홍콩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요인으로 인한 GDP 성장의 0.1~0.3%p 손실을 언급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연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중국 경제의 급격하고 ‘잔인한 하락’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근거로 미국과 관련된 중국 중소기업 환경에서의 '최악의 상황 예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연구 개발을 위한 계획 기금의 GDP 대비 0.2~0.3%p 부족과 2018년 말 평균화와 고립을 염두에 둔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베이징 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생 단체의 급격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고조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경제의 '생존 잠재력'은 충분히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말 3조 달러 이상까지 증가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국을 더욱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며, 유럽의 사회기반시설과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중국의 준비성은 선진국에게도 매력적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엄격한 한계를 유지하는 경우 중국의 '발전 잠재력'은 본질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세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확장과 중국의 미국 첨단 기술 도입 문제인 것이다.

'무역 전쟁' - '무역 마찰' 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행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불가침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즉, 중국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당 행위 이후에만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표 1).

공식, 비공식 단계에서 (비록 이미 초조함을 감출 수 없더라도) 중국은 '선량한 의지'와 함께 협

상을 통한 미국과의 무역-경제 관계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량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2018년 결산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사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보다 10% 증가한 4,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무역 및 경제 '마찰'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새로운 삼자 경제 협정도 주시하고 있다. 협정 조항은 중국 정부의 특별한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협정에 따르면 세 참여국 모두는 만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들이 통제 경제와 협력한다면 그 효력을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바로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제재나 인상된 관세를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협정의 첫 번째 결과는 캐나다와 중국 간 자유 무역 협약 체결 업무의 중지였다(협상은 2016년 시작되었으며, 중국은 캐나다의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새로운 북아메리카 삼자 조약과 유사한 미국의 협약은 EU 및 일본과도 체결될 예정이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무역 제한 정책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일본에서의 중국 어선 선장 체포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속 수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 인권 운동가 류샤오보에 대한 노벨상 수여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제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확대 이후 필리핀에서 바나나

표 1. 양국의 무역 및 경제적 타격 목록

No.	날짜	사건
1	2018년 1월 23일	미국은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주재료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태양광전지 및 주재료 관세는 2018년 30% 인상, 이후 2019년 25%, 2020년 20%, 2021년 15% 인하, 세탁기는 20% 인상)
2	2018년 3월 23일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각각 25%와 10% 인상했다.
3	2018년 4월 2일	중국은 120개와 8개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15%와 25% 관세를 도입했다. 수입품 총액은 약 30억 달러이며, 돼지고기, 과일, 항공기, TV 및 의료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4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그 중에는 자동차 및 항공기 생산을 위한 개별 부품들, 컴퓨터용 하드 디스크, 발광 다이오드, 다양한 하이테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5	2018년 7월 6일	중국은 545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도입했다. 총 수입량은 약 340억 달러이며 대두, 육류, 자동차, 낚시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6	2018년 7월 11일	미국은 관세가 10% 인상될 6천 개 중국 수입 품목 명단을 발표했다. 총 수입량은 약 2천 억 달러로 평가된다.
7	2018년 8월 4일	중국은 미국이 7월 11일 발표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관세가 인상될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확정했다. 2,493개 제품에 대해서는 25%, 1,078개 제품에 대해서는 20%, 974개 제품에 대해서는 10%, 662개 제품에 대해서는 5% 인상될 예정이다. 총 수입량은 약 600억 달러로 평가된다.
8	2018년 8월 23일	미국은 279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도입했다. 총 수입량은 약 260억 달러이며 오토바이, 트랙터, 철도 설비, 무선 기술, 모터와 농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9	2018년 8월 23일	중국은 141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도입했다. 총 수입량은 약 160억 달러이며 화학 및 에너지 산업 제품, 의료 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10	2018년 8월 23일	중국은 미국의 관세 도입과 관련하여 WTO에 재소했다.
11	2018년 9월 11일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중지했다.
12	2018년 9월 11일	중국은 미국에 160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가할 것을 WTO에 제안했다.
13	2018년 9월 24일	미국은 2천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인상·도입했다.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전자 게시판, 라우터 등과 네트워크 설비, 식품, 기계, 농산물, 이른바 '스마트워치'와 아동 카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관세는 25% 인상될 예정이다.
14	2018년 9월 24일	중국은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0개에 대한 5%와 10% 관세를 인상·도입했다.
15	2018년 12월 1일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화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16	2018년 12월 1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의 재정 책임자이자 설립자의 딸인 멩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었다.
17	2018년 12월 10일	캐나다 시민 마이클 코브릭이 국가 안보 위협 활동 명목으로 중국에 억류되었다.
18	2018년 12월 13일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가 국가 안보 위협 활동 명목으로 중국에 억류되었다.
19	2019년 1월 7~8일	미·중 간 1라운드 베이징 협상
20	2019년 1월 30~31일	미·중 간 2라운드 워싱턴 협상
21	2019년 2월 1일	중국 국영기업 '코프코 그룹'은 미국에서 대두 1백만 톤을 구입했다. 2018년 초부터 중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대두 총량은 650만 톤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평균량의 21.5%에 해당하는 것이다. 협상 결과 류헤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측은 5백만 톤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상공부 및 미국과 중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수입을 제한했다. 2017년에는 남한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전개 이후 중국 내에서 남한의 롯데마트를 보이콧했다. 그러므로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설명되는 미국의 무역 제한을 어떤 ‘윤곽선’ 같은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

자국 경제의 취약점을 인지하며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행위에 착수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몇 차례 낮추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2019년 약 1,050억 달러를 중국 경제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중국 재무부는 외국 및 중국 기업에 대해(무엇보다도 수출기업) 영업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작성했다. 이미 이전의 영업 이익 자금 중 일부를 중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납부 감면 정책이 발표되었다(유가증권으로의 재투자자를 제외하고). 재무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영업 이익 범주에는 배당금과 공동 보너스를 포함한 주자본 투자 지출이 속한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되었다. 즉 기업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중국은 개별 항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1,585개 제품이 적용되었다(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관세가 부과되는 전체 제품 수의 약 19%에 해당한다). 평균 관세는 10.5%에서 7.8%로 낮아졌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중국 지도부의 경제 전략에 대한 발언은 많은

‘다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9월에 중국 북동부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시 주석은 이미 선언된 국유 자산의 민영화 개혁 선상에 반하여 중국 국영 기업 유지 필요성을 천명했다(국영 기업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중국 국영 기업 시틱 그룹 전 대표 쿤단도 중미 ‘마찰’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유시장 민주주의라는 두 경제 체계 간 경쟁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조로 발언했다.

동시에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중국 동부 방문 중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한 비용 감소와 통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국가의 다양한 경제 지원 방법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총 1,900억 달러 규모의 농촌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 경제 개선 계획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쓰레기 재가공부터 엔젤지수(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비의 비중)의 최적화까지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관광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의 소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예를 들면, 지방 지도부는 관광 명소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해 입장료를 낮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미국의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ZIE사는 ‘전혀 예상치 않게’ 중국의 세 이동통신사에 설비를 납품하여 이익을 얻었다. 차이나모바일이 GPON 설비를, 차이나유니콤은 전자 패널과 교환기를, 차이나 텔레콤은 교환기를 구입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 거래하기 위해 전문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계획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다.

언론의 '중국의 반격'이라는 문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및 경제적 '마찰'을 다룬 이른바 백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중국은 미국이 야기한 무역 경제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현 상황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며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이전처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상호 존중과 조약 준수를 (상호 존중과 조약을 준수할 때에만) 준수할 때에만 그러하다('목구멍에 칼을 대고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 중국은 또한 투자와 자유무역에 대한 중미 협약 체결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중국은 WTO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중국 내에서 이 분야 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노력할 것이다.
- 중국은 자국 및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 중국은 개방 방침을 고수한다.
- 중국은 EU와의 협력 발달(중국-유럽 투자 협약 체결 협상 지속)과 중국과 일본, 남한 간 자유무역 구역 창설을 위한 협상 과정 가속화,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 내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다.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공격

미·중 무역 마찰의 세계화는 현재 중국의 중요한 대외 경제 전략인 '일대일로'를 건드리고 있다. 최근 세계 언론에서는 중국의 상대 국가들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위협하는 소문과 보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통화기금은 이른바 중국의 '빛의 닳'에 걸린 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 국가들을 중국에 종속시키기 위해' 틀림없이 '그 닳을 사용할 것이다'.

최근 이른바 새로운 '중국의 식민주의'의 출현에 대해, 특히 서구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나지만, 기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 순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이다. 유럽 주요국 정부들은 EU가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활동 때문에 EU의 단결을 무너뜨리려 하는 중국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세계 언론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강조하여 퍼뜨리고 있다. 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몰디브의 15억 달러 부채와 스리랑카의 함바토타 항구의 중국 임대, 중국 자본으로 공항 건설을 거부하는 시에라리온, 파키스탄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건설에서 중국 기업과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기한' 안에 약 400억 달러를 중국에 '강제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중국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용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중국 차관은 언 평

균 5~6% 이하로 제공되는 반면, 국제 은행 차관은 2~3% 이하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재정적 투명성, 생태 및 기술 안전성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덜 효율적이고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력만 사용된다는 점 역시 비판하고 있다.

최근 예를 들어 미국의 C4ADS,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 독일 상공회의소 협회 공동 독일 주 정부 기관 Trade & Investment와 같은 서구 싱크탱크들에 의해 '일대일로'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보고서가 쏟아졌다.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언론과 연구자들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만일 정치 및 사상적 내용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모든 언론 보도 및 그와 유사한 보고서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 프로젝트로 인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에 대한 경고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및 노동력 공급자인 지역 비즈니스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폐쇄성에 대한 불만이다.

'일대일로': 새로운 중국의 보호

'일대일로'에 대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빛 외교'라는 용어는 2018년 중반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조일 때 인터넷 공간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용어는 하버드 대학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샘 파커 교수가 작성한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다.

중국 '빛 외교'의 '상징'은 앞에서 언급한 스리랑카의 함바토타 항구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곳은 '일대일로' 구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인

2008년에 이미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 주계약자는 차이나하버엔지니어링사와 시노히드로사였다. 건설 자금의 85%는 중국 엑심 은행 차관이였다. 2010년 항구는 부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이윤은 예상보다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국영 기업 초상국항만(China Merchants Port Holdings)과 새로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초상국항만은 항구 운영 기업의 70% 지분을 받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구 자체는 장기 리스 상태가 되었다.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항구 개발에 약 6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했다.

전문가들이 '빛 외교'에 추가하는 또 하나의 예는 필리핀의 다리 두 개 건설에 대한 보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설비가 차관이 아닌 중국의 보증으로, 즉 필리핀에게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이 다리는 필리핀의 국유 재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역선전은 아프리카에서의 '빛 외교' 문제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반대자들과 논쟁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중국의 신식민주의'라는 명제에 대한 의구심에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일련의 반론들이 나타난다.

이때 중국은 특히,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선도적인 국제 연구 학회 보고서 저자들과 같은 미국 저자들의 자료와 판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주채권자는 서구 금융기관이다. 중국은 지부티, 콩고, 잠비아 같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주채권국이다.

중국은 서구 반대자들의 논거를 강조하고 있

는데, 특히 쉘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주로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생산공장, 농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규모는 유용광물 채굴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예에서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 공전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에 의해, 그리고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 프로젝트(철도, 다목적 파이프라인과 가스관)의 중단이 중국의 확장이라는 위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국부 펀드인 원말레이시아개발(One 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자금을 고려하면 45억 달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펀드는 2009년 만들어졌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측에서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틀림없이 7억 달러를 착복한 전 총리 나지브 라자크와 관련이 있다. 확실한 반례로 중국은 지금 중국 내에서 총액 약 1천 3백만 달러의 중국 자본과 기업이 참여하는 10개 이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중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선전은 파키스탄의 주채무국은 중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 기관이라는 상황을 인용한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르면 2019년 파키스탄의 총채무액은 950억 달러가 넘으며, 2022~2023년까지의 그 수수료는 310억 달러 정도이다.

중국은 자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평가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윌리엄앤마리 대학’의 연구를 언급하기 좋아한다. 그에 따르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역 경제 발달 수준이 균일할 때 중국의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가 ‘더 높은 효율성’을 보장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선전은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건설과 그것이 실현되는 국가의 경제 발달 속도 상승 간의 분명한 관계’를 나타내는 해당 연구의 또 다른 인용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객관적 분석의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관대함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지만, 서구 국가들과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 그에 관한 비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명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시진핑도, 중국의 다른 어떤 공식적 인물도 ‘중국 구상의 관대한 성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구상 참여가 무상일 수 없다는 사실은 논리적이다. 게임 조건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여러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신식민주의 정책’ 실현이라는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과장된 것이라는 중국의 논거에 동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은 미개발국가의 자연자원을 ‘불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개발국가의 새로운 자연자원 개발을 ‘상호이익이 되는 균형잡힌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며, 사회기반시설에 자국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규모 ‘빛 외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파키스탄에 있어서 주요 채권자는 여전히 국제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정책과 고유 전략의 장점에 대한 증거로 국제 금융기관들과 달리 중국 정부는 수혜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경제 개방', 환율 자유화, 정치 개혁 등과 같은 국가 경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이것은 무엇보다도 철학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이다. 중국 기업이 건설을 하고, 그 후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소유하게 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더욱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다 채무국이고, 다양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가능성도 없으며, 국제 금융 기관은 도움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일본, 인도, 국제 통화 기금과 아프리카 개발 은행으로부터 함바토타 항구 건설을 위한 장기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인권 파괴' (스리랑카 정부와 분리주의 운동가들 간 장기간의 '타밀 일당 해방 호랑이'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 또는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사업적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다섯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미국의 프로젝트에서 자국 회사 사용 면에서의 원칙적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정말로 미국의 다양한 형태의 '신실 크로드'의 경우(2011년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아프가니스탄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의 '신실크로드'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기업이 건설을 맡았었는가?

여섯째, 중국에 넘어간 스리랑카의 함바토타 항구에 대한 '다각적 결합'이라는 논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다른 예는 아직 없다). 중국 정부는 매우 복잡하고 값비싼 결합을 이행했다. 상업적으로 항구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했지만, 이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스리랑카 정부를 설득했고, 차관을 주었으며, 항구는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그 이후 중국 기업은 추가로 1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했고, 항구 개발에 다시 6억 달러를 투자할 의무와 함께 99년간 리스권을 받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곱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활발한 비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경쟁 첨예화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저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경쟁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 넓은 맥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국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본토박이인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밖의 대국인 인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개념 및 정책적 가능성을 만들고 (QUAD라는 이른바 사자 협력의 형태로), 중국을 저지하고 미개발국에서의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라는 선택적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국가들을 가시권에 두기 위해서이다.

전략은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제개발 금융공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600억 달러까지 증가하려 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 정부는 그 지역 내에서의 미국 기술 발달을 위해 2,500

만 달러를 할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금융보험공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당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협약했다.

중국의 대러 관계에 대한 ‘마찰’의 영향

미국과의 문제 도피처로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 정책은 계속 수정되고 있다. 여기에도 상황의 다면성을 반영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러시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무역(2018년 상품 유통량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및 군사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무기 구입 및 개별적, 또는 대규모 군사훈련), UN과 기타 국제기구 내에서 보란 듯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가 쌓여가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자를 찾으면서도 중국은 러시아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대규모 비즈니스는 미국 제재에 포함시킨다는 협박 때문에 러시아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018년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금융가와 기업가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가 중국 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의 파트너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국영 기업은 그러한 신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여기서 중국에 추가 논거가 요구되는 것은 대규모 개인 기업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논거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제재’ 아래 있고, 이것이 양국 반미 동맹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러시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 협약이 그 제재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닌 관세 ‘보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본래 경제 분야 자체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외정치 분야에서는 현재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전통적인 인증 형태뿐만 아니라) 개념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중국은 최소한 자국에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전략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동으로의 전환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목적과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할애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과 한국, 아세안과 미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둘째, 정말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가, 반대로 원하지 않는가? 러시아는 정상화 준비가 되어있지만, 공은 트럼프 손

에 있다는 식의 답변을 중국은 현재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중국이 미국과의 현 대결 속에서 러시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번역: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sy@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Китай – США: МНОГОВЕКТОРНОСТЬ “ТОРГОВОЙ ВОЙНЫ”
- 출처 : 세계경제와 국제문제, No. 5, 2019 (게재 예정)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

※ 2018년 4월 9일 '세계경제와국제관계'지 편집부에서 진행된 원탁회의 보고서

본 편집부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안보분야와 국제경제분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분석하고자 토론을 마련하였고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연재합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아태지역의 주도국(중국과 일본), 국제연합(아세안)의 정책진화,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정을 둘러싼 전망과 양태를 검토하였습니다.

A. V. 라보프 : 본 회의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지역 중 한 곳인 태평양 아시아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빠르게 부상함에 따라 힘의 균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분야에서는 기존의 국제동맹들과 국제기구가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지 의구심이 일고 있으며, 새로운 양태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습의 국제관계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지는, 이미 기능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발전 전망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태평양 아시아 국제관계 체계

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변화의 강도는 어떠할지 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V. 다비도프 : 이런 과정을 분석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의 경계가 막연하고 '태평양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평양 아시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태지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 아니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국가들의 범위를 새로이 명명한 것뿐인가'하는 점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V. V. 슝스키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지 편집부가 우리에게 익숙한 ‘아태지역’이라는 용어보다 ‘태평양 아시아’라는 단어조합을 선호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아태지역’이라는 용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난 30~40년 동안 대중매체나 전문가의 연구저작에서 항상 호혜적 기대감 속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아태지역과 관련하여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현대화되고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투자활동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물론 그런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전 1.0’ 이후 아태지역은 시장 논리가 자리를 잡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포용성이 확고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노선 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모든 지역국가들을 자국에 편입하여 환태평양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들을 포용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생각은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전문가 집단이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현실 변화와도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태지역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이르게 될 것인지,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에서 구소련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이자 사회평론가 올레크 아린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인 1997년 모스크바에서 ‘아태 지역: 신화, 환상, 현실성’이란 제목으로 방대한 양의 업적을 내놓았습니다. 올레크 아린은 자신의

저서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완전체로서 ‘아태공동체’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경제 안에서 왜 불가능한가를 논하였으며 나아가 아태지역이라는 개념에 근본적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997년에 아린은 이미 이 가설적 지역은 미국노선을 따른 것인가 중국노선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그 기저에서 전략적 붕괴에 직면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의 양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강국의 이해는 결국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립구도는 결코 화해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구조는 유포피아라는 것입니다.

O. V. 다비도프 : 우리의 논의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런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완강하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지역을 새롭게 지정학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완강한 미국의 태도를 볼 때, 거대한 공간과 국가들 그리고 문제들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향후 정치학사전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보면, 현재 아태지역은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세안 중심의 구조들만 사실상 유일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계획하는 ‘뉴델리-도쿄-캔버라-워싱턴’이라는 거대 4대도시를 잇는 경계 너머의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현실상황에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V. M. 마지린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시도는 근거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새로운 군사동맹체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에 가입하라고 직접 제안했지만 분명하게 거절한 베트남의 경우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V. V. 미헤예프 : 아태지역은 ‘러시아식 용어’이며, 아태지역에 대립해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식 용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아태지역이란 개념은 아세안과 아시아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60-70년대에 정치학계에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반면 구소련에서 아태지역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동아시아정상회담(BAC)에 가입한 다음 이를 계기로 APEC과 협력하려는 인도의 바람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처음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도 경제가 허약해서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안이자 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합하는 소위 4각안보협력(Quad(Quad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형식을 빌려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태평양 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와 경제협력체제는 새롭게 주도국의 위상을 점하려는

중국의 야심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최우선’ 정책이 충돌하면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아태지역이나 러시아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의 야심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아태지역에 러시아는 없으며 실제 외교에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A. V. 라보프 :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태평양 아시아와 그 경계라는 개념은 자체로 대단히 논쟁적이며, 이 거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해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A. D. 보스크레센스키 : 태평양 아시아에서 현재 국제-정치·군사-정치·무역-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계적 차원의 원인과 지역적 차원의 원인들을 언급하자면 기본적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글로벌화. 글로벌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양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재정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면적 발전노선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공적 발전모델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실용주의와 결합하면서 유연한 권위주의의 모습만 살아남아 발전하고 있으며(중국),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국가권력에 유입되면서 유연성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노선을 이끌

고 있습니다.

- 현대화. 현대화 또한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한정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성공모델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통합. 세계통합, 단일조세정책 수립과 EU 통합, 유럽연합 주변부 통합, 통합속도와 통합모델의 다극화 실험(아세안) 등 새로운 형식의 통합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역통합화. 국제지역주의와 지역횡단주의가 통합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할 것이며, 경제-정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최대지역과 중간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방식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세계 공간의 지속적 분화 과정. 기존의 발전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후발 발전대안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타 공간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부재하다면 후발 발전대안은 새로운 조건 하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약의 기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계 공간은 개별 지구단위로, 개별 지역단위로, 나아가 개별 국가단위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분열될 것입니다.
- 세계 체계의 질적 복잡화.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관계들을 맺어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각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추구하면서 내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인해, 위계성이 확고한 다층적 체계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층적 유사성을 추구하는 체계가 확립됨으로 인해 세계 체계의 질적 복잡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전과는 다르게 공개적이고 대단히 복잡하며 높은 경쟁력을 구비한 체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에는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아직은 학문적으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개념들인 '부메랑효과', '툰니바퀴효과' 등이 나타나지요.

새로운 현상들을 보여주는 예는 많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유라시아경제연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의 개방형 조정방식 등은 모두 세계 체계가 질적으로 복잡화되었다는 예들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세계와 태평양 아시아의 상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적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역시 여러 층위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V. M. 마지린 : 좋은 분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보충목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다음 요인들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 일극 세계질서의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강요정책을 추진하면서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일극 세계질서는, 동방대륙문명 및 서방해양문명이 쇠퇴했던 자연스러운 역사의 노정에서 보듯이, 새로운 세계발전모델로 대체될 것입니다.
- 우선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 회복. 러시아의 독자적 대외정책 수행과 이를 통한 서구의 간섭을

받고 있는 민족들의 고유한 민족적 가치와 이해의 수호.

- 서구와 러시아 간 냉전의 부활 및 영역 확대, 혼란스러운 국제질서, 문화-이데올로기 충돌.

태평양 아시아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인들 중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중국의 부상,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 지역 강국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변화 시작. 해양 노선을 포함한 중국의 초대형 프로젝트 '일대일로' 가동.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확대.
- 이런 경향에 대한 미국의 반대, 태평양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베트남 식 반(反)중국 노선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이용하여 중국 압박. 그 결과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유지. '무역 전쟁'의 시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지역통합체.

이런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태평양 아시아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A. N. 페도롭스키 : 최근 20-30년 동안 아태 지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때로는 불평등한 양상을 때로는 낙후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 속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선호했던 방향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지역적 차원에서 1994년 아태경제협력체(APEC) 보고르 선언에 따라 무역자유화

라는 과제가 점차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안보 영역에서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유지되어 온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군사적·정치적 행위를 역내 국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국, 아세안 회원 국가들, 러시아가 참여하는 역내 포럼에서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 간 대화와 정기 정치협의체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아태지역에서 발견되는 혼란스러움은 두 가지 모순된 과정이 충돌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상호연계성이 강화되었으나, 경제-정치-군사 분야에서는 격화되었던 대립이 2010년대 내내 더욱 첨예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과정에 덧붙여 불안한 한반도 상황과 국가들 사이의 갈등위협(남중국해를 비롯한 영토분쟁,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대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는 대외경제 문제를 역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태경제협력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보고르 선언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교역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소속 국가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오랜 군사 동맹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들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과연 미국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 중국(러시

아와도 마찬가지로)과의 관계에서 대단한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워싱턴-도쿄-서울을 잇는 3자 군사-정치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지역 포럼이나 대화는 모든 관련국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역내 안보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법적 토대를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A. V. 라보프 : 이 지역을 둘러싼 그런 심각한 변화는 기존의 관성적인 발전시나리오를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대화 형식이나 새로운 동맹 또는 연합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A. G. 볼로딘 : 태평양 아시아에 있어서 발전의 관성은 의미를 갖습니다(그리고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세안과 동북아시아의 '프로젝트들'은 내적 도전과 외적 '쇼크들'(재정-경제 위기, 동남아시아 이슬람 정치 세력의 부상, 중국 천하사상의 대외경제적, 지정학적 '팽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생명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지역 '재편' 계획안들이 더 위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들은 정치 엘리트와 '민족적' 성향을 대표하는 기구들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평양 아시아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신들은 경제성장 가속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구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가는데 여전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O. V. 다비도프 : 태평양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경제발전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역내 기구들의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분명한 징후들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관성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기구들의 생명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단지 이 기구들로 하여금 단호한 행동을 하게끔 요구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프리카공동체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기구들은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기구라기보다는 논의를 위한 협상과 대화의 무대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좀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안보기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설립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국의 독립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아시아 측은 그와 같은 생각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측은 자신들이 만든 군사동맹 체제에 기초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안보기구를 설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향후 태평양 아시아는 십중팔구 중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그 외형이 결정될 것이지만 아직은 그 외형을 정확하게 그려볼 수는 없습니다.

V. M. 마지린 : 비록 지역 국제협력기구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성적 시나리오에 따른 상황 전개는 가까운 미래까지만 해당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

구와 동맹이 등장할 것입니다. '일대일로'를 통한 아세안경제협력체, 그리고 유아시아경제공동체(EAEC)·상하이협력기구(SCO)를 연계하는 대(大)유라시아의 구성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태평양 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입니다. 이런 지역적 통합은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대안이고 세계화전략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국 미국의 세계화 계획안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아세안+' 형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좀 더 분명한 외형과 내용을 이미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통합적 계획안들,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II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통합체'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A. D. 보스크레센스키의 의견). 아태경제협력체(APEC)은 토론의 장, 다시 말해서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협력 메커니즘을 토의하고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경제적 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중국·미국을 포함한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구가 설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 D. 보스크레센스키 : 세계 체계가 질적으로 복잡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시나리오는 중기적 전망에서뿐만 아니라 단기적 차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새 임기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신이슈

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의 집권연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소강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진핑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 하는 중국 헌법 개정안들이 입안되고 채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대일로' 계획안을 현실화하려는 시진핑의 노력과 구상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문제 해결이 요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상회담 개최를 천명하는 등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해결방안 중 실패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큰 대안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태평양이라는 기능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경제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을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대외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도부의 역량을 총동원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치 분야의 최고결정권자들은 신기술개발을 통해 경제를 다시금 도약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경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케인즈 학설에 근거한 낡은 경제성장 모델 재검토하고, 구태의 연한 낡은 모델을 던져버리고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생산요인들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탐색하고 있습니다.

A. V. 라보프 : 태평양 아시아에서 관성적 시나리오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는 서로 견해가 달라지는군요. 게다가 관성적 시나리오를 깨뜨릴 수 있는 핵심변수 중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중 관계라는 점은 발표문에서 여

리 번 언급되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 발전에 미중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부터 이야기해보죠.

V. V. 미헤예프 : 시진핑에게 종신 전권을 위임한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무역 및 다른 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미국과 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3월 회의 이후 시진핑은 권력유지의 시간제한에서 벗어난 절대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로 맞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최우선’ 정책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을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세계에 알리려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최근의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홀륭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중국도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V. 로마노프 :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미국과 중국은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보복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서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신랄한 성명서들은 대규모 무역이 마찰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중 정치관계를 안정화하는데 무역이 더 이상 담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대중매체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입장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열렬히 전개하였습니다. 무역 갈등을 도발하려는 미국에게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중국은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무역 분쟁은 1950년 한국전쟁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중국 영자신문 ‘Global Times’는 미국의 수입관세 확대에 대한 자국의 대응을 1950년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국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는 물리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으로 국가를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는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패권자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무역 수비벽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일 무엇을 더 잃을지 알 수 없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외부충격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포함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4대 자신’, 즉 도로자신·이론자신·제도자신·문화자신을 주민들에게 교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사회주의 ‘신시대’가 선포된 후 권력과 당 지도부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하는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시대’에서 중국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강해질 것이므로 중국은 이제 미국의 압력에 반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근거는 거대 국내 소비시장과 완전산업체계에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는 생산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덜 듭

니다. 중국은 서구시장모델과 비교에서 국가지도 혁신발전이라는 중국모델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높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미국이 무역제한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개념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6일 중국 외교부 루강 대변인은 미국과의 무역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단면주의와 다면주의의 전쟁,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전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다면주의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세계경제가 부흥하는데 있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것이고 지구촌 공동이익에는 더 큰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 갈등은 곧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두 요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즉 미국의 폐쇄성과 힘의 압박 대 중국의 개방성과 협상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미국을 향한 맹렬한 비판은 세계경제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자는 논리에 대한 중국의 변함없이 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건설적 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무역자유화 노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논의의 주제를 강력한 산업강국으로의 변화계획이 아니라 수입관세 인하와 무역한

경 개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국가회의 산하 국가발전연구소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자오장웬은, ‘첸민지바오’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잠재력 균형에서 격차가 줄어들에 따라 미국은 강력한 경쟁국으로서 중국의 능력을 꺾으려고 실제로 중국의 첨단기술과 선진산업발전을 저지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과학기술 주도권획득을 목표로 하여 10개 핵심노선에 따라 진행될 “2025년 Made in China” 프로젝트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국수주의 문건들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중국은 대(對)미 수출 및 투자 제한이 무역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산업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의 표출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양측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적 소유권 방어라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산업을 구입하는 데 장벽을 세우려 합니다. 또한 중국시장에 미국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기술제공을 합의서에 삽입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기술공장들은 판매를 위한 해외시장들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자국시장 진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V. V. 슈스키 : 20년이 흐른 후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하여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

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움츠러 들지 않고 똑같이 맞대응하고 있지요. 수많은 징후들로 보건데, 두 슈퍼파워의 무역전쟁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경제기구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아태경제협력포럼이 지지해왔던 무역-투자 자유화과정을 뒤로 되돌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A. V. 로마노프 : 2018년 봄에 있었던 사건들은 미중 사이에 본격화된 무역-경제전쟁이 지역경제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전쟁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투자자금이 서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중국의 자금은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자국시장에 미국 농산물 수입을 불허한다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및 호주의 농산물이 그 틈새를 메우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들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동맹과 정치적 신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시장에서 돈을 기회를 노릴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에 접근하려는 중국을 제한할 통로로 동반자협정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유리하게 동반자협정의 규정을 깊이 있게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확

률은 높지 않습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무역세율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일대일로' 국가들의 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에도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화 환율의 하락은 아시아 경제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V. 라보프 :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아태지역의 다면적 협력체계에서 '불회귀점'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지역통합 계획안들,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O. V. 다비도프 :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대립의 격화 또는 상호 양보를 기반으로 동반자관계 수립), 아세안 중심구조는, 냉전의 종결과 구소련 붕괴 이후 불럭불가담 운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완전한 마지널리티(주변성)가 될 때까지 통합을 계속해서 시험받고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에 따라 현재 아시아를 재그룹화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V. V. 슝스키 : 아태경제협력체(APEC)이 헛바

위를 돌릴 경우 태평양 공간에서 중국 없이 미국(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미국 없이 중국(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제안하는 새로운 형식의 협력체를 수립하려는 시도들은 어쨌든 아직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위기, 일극 세계에서 다극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위기, 서구중심의 세계에서 비서구권 문명이 전면부상하는 세계로의 이행에 따른 위기의 징후들로 볼 수 있습니다.

V. M. 마지린 : 미국이 주창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주춤한 이후에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계획안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찌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독창적 시도가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II에 한번 썩긴 '희석된' 프로젝트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의 20개 항목은 미국의 엄혹한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만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요구하는 정치적 조건(지역문제 조정에서 각 민족의 이익보다는 전체 지역의 이익이 우선함, 공공재의 민영화나 국가의 특권 박탈, 직업동맹의 자유, 외국인직접투자자 다국적기업의 활동 제한 철회, 서구의 지적 소유권 보호, 생태학적 규범과 합의의 준수 등)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현저히 완화된다면, 참가국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관세 및 기타 장벽들을 극복하여 무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선진적이고 현대 규범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협정서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없는 동반자협정의 실제적 리더는 일본만이 될 터이지만,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II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두 얻어낼 수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대만을 시작으로 하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아우르는 수많은 국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참가국들이 없다는 사실은 이 합의서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잘 보여준다. WTO 수준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자국 시장으로의 진입자유와 진입장벽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갖춰진 자유무역에 합의하는 길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륙횡단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형식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그랬듯이, 현재 국제적 난기류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은 성숙하지도 못하고요. 냉전은 광범위한 경제통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태평양 아시아에서 무역-경제 협력이 발전하는 정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V. V. 미헤예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화라기보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 주장하는

4개 생산요인 가운데 최소 3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1)자본(투자의 규범과 표준), 2)노동(노동법) 3)노동에 대한 사고의 혁신(지적 소유권 보호)이다. 현 단계 미중 무역전쟁이 종결된 다음 향후 '미중 간 투자 합의서 + 지적 소유권 보호 합의서 + 최저 임금과 기타 노동법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관계에는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기반이 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서 '축소된', 2018년 3월에 체결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II의 참가국들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중국, 남한, 그리고 아태지역의 여러 다른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A. N. 페도롭스키 : 아태지역의 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간단하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들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행동양태는 쉽게 동요하고 통합적 전략 측면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도국들이 현재 그 방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고 양국의 대외정책이 새로운 민족적·지역적·세계적 상황을 반영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하는 힘은 미국이 독단적 행동을 못하게 막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힘(국제지불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위상, 신용-금융서비스의 구조와 질, 과학기술 잠재

력 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초강대국들이 발의한 모든 거대 프로젝트들은 핵심 경쟁자-파트너가 참가하지 않는 한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조항에 따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행동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강행해서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중국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대안으로 내놓은 거대 프로젝트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밖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 없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역통합기구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무역-경제 상대국이 참여하는 양자회담에 집중하려고 트럼프 행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위 밖에 있는 중국 및 한국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에 상응하는 양보, 즉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 '일대일로' 개념을 로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지역통합 방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가 팽창할 수 있는 호혜적 기반과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리스트' 시진핑은 '보호 무역주의자'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5년 북경 정상회담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국

가들의 아태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자는 목표를 중국이 선포하였고, 2016년 로마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로드맵 채택 전망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다낭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런 구상에 대해 관심이 여실히 줄어들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역 경제에서 상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지역 협력을 위한 경제적·법적 규범들을 정하는 적합한 국제기구들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쟁이 벌어질 위험과 국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가까운 미래에 지역을 주도하는 강국들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적·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주도권을 서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곧 결정될 것이라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와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합의에 기반한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실효기간과 양상은 어떠한지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스스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A. V. 라보프 : 태평양 아시아에서 미중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전반적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정치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A. V. 로마노프 :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은 미국과의 협력은 줄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미국은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합의하여 중요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모습을 이제 중국에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으로의 전환’은 중국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유라시아 쪽, 다시 말해서 ‘서구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향선회 정책은 미국 시장을 대신해서 중국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V. M. 마지린 : 중국의 권력시스템의 변화는 태평양 아시아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공개적이고 집요하게 자국의 이해와 발전모델을 내세우려 할 것이고 그런 점은 지역 국가들의 경계심과 저항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노선에 부합하려는 양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노선을 따르려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과 달리 중국노선에 즉각적으로 동참하려 하지 않고 ‘버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발전노선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반대할 터이지만, 향후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에 접근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의 태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구체화됨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

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기간과 폭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담은 다음 호로 이어집니다.

A. 라보프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원제 : Переформат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зии : векторы и динамика изменений
- 출처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2018. Vol. 62. No. 12. pp. 110-118.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 : 변화의 벡터와 동향(II)

(지난 호에 이어 게재)

A. N. 카르네예프 : 아태지역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말하려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 발전에서 새롭게 나타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17년 가을)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2018년) 결과뿐만 아니라, 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대한 결정, 모든 통치 부문과 사회 활동에 대한 공산당의 보다 더 전면적인 통제 실시 등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다방면에서 정책 방향의 다양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경향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대외경제 주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 자유화 과제가 천명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사회 활동과 시민사회의 제도 기능, 사상·정치 활동 부문에서는 자유화와는 정반대의 기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시절에 활발해진 사회·정치적 분위기는 대대적인 압박

속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다양한 사상 및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침묵하기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개혁개방은 40주년을 맞이하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안팎에서 개혁 심화 전망과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7년에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자유 시장과 세계화의 수호’로 평가한 연설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또다시 다보스를 방문하는 대신 그의 노선을 계승했고, 3월 전인대에서 중국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된 오른팔 류허를 보냈습니다.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었던 류허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이 새로운 개혁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크게 벗어날 수 있다”¹⁾라고 밝혔습니다.

1) Available at: https://news.mingpao.com/pns/dailynews/web_tc/article/20180125/s00013/1516817912740

개혁 지속 노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개혁개방의 선구자인 덩샤오핑의 유산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논의가 중국에서 전개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일 년 전에 중국 안팎의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시진핑 집권 시대의 소위 점진적인 ‘덩샤오핑의 유산 와해’에 대한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분석가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으로는 1989년 민주화 운동의 학생 리더 중 한 명으로 지금은 이민을 간 왕단이 있습니다. 그는 덩샤오핑의 유산 거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 ① 덩샤오핑은 대외정책에서 도광양회 원칙(중국의 최우선 이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모든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장 견지를 최대한 멀리하는 정책)을 우선시한데 비해, 시진핑은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전 세계에 중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 ② 덩샤오핑은 계급 투쟁과 문화대혁명을 부정한 반면, 시진핑은 ‘두 개의 30년’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마오쩌둥 통치 기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의미함).
- ③ 덩샤오핑이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을 보인 반면(덩샤오핑 시절 다양한 이데올로기 진영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가졌음), 시진핑 집권 하에서는 국가가 예외 없이 모든 사회 활동 부문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진핑은 중국 사회에서 다원주의

와 사상·정치적 다양성이 점차 발전해 온 지난 20년을 뒤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 ④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의 비극적 경험과 마오쩌둥의 부정적 역할을 바탕으로 국정 통치 시스템 수정을 고심한 끝에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고, 집권 기간에 제한을 뒀으며, 그럼으로써 적법한 지도부 쇄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당의 활동을 정부 활동과 분리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편향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수많은 사건 중 을 초, 중국 초중고 교과서에 ‘문화대혁명’에 관한 새로운 평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의 동란’으로 평가되는 이 기간에 대한 기존의 표현을 이제는 ‘어려운 탐색의 10년’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대신합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혼란과 역경’이라는 개념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 내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으려 했다고 언급됩니다.³⁾

흥미로운 점은 4-5년 전, 시진핑 집권 초기에 점진적인 ‘탈덩샤오핑화’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지가 유사학계에서 매우 폭넓게 논의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덩샤오핑의 슬로건 중 다름아닌 ‘도광양회’에 대한 사상이, 다음으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먼저 일부만 부유해진다’는 표현이 노후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많은 이들이 ‘돌다리를 두들겨가며 건너라(이데올로기나 정책적 한계

2) Available at: <https://www.rfa.org/mandarin/pinglun/wangdan/wd-03022017125313.html>

3) Available at: http://culture.dwnews.com/renwen/news/2018-01-11/60034932_all.html

를 회고하지 않는 과감한 실험주의 원칙)는 메시지가 오늘날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부는 덩샤오핑 모델로부터의 탈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⁴⁾ 이 부분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언급해두자면, 외국인들에게 있어 덩샤오핑의 모델은 개혁개방에 대한 전념의 상징이었다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꽤 오래 전부터 사회 분화 과정을 무시한 채 GDP 성장률만을 무모하게 좇는 것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 및 방임, 사회 도덕의 상업화, 중국 공산당이 가진 '기존의 가치' 퇴색 등 '덩샤오핑 모델' 및 그 계승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 특징에 대해 널리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임무(덩샤오핑과 그 계승자들이 구축한 '특수' 사회주의의 탈을 쓴 국가자본주의 속에서 인민의 눈앞에서 '붉은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정당성이 상실되는 상황으로부터 당을 구원하는 일)를 고려해 보면, 실제로 중국 통치 계층이 '중국 개혁개방의 감독'이라는 유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일을 합리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꺼낸 새로운 개념인 '중국식 모델'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식 모델'에 대한 논의가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2009년 즈음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당시 세계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관측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식 발전모델(소위 '제3의 길')이 매력을 상실한 서방의 자유 경제 모델에 비해 (적어도 개도국에 있어) 최고의 효율을 입증했

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완전히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5세대 지도부(즉, 시진핑)의 권력 승계와 관련한 2012년의 중국 대내 정치 사건들은 '중국식 경제 기적'의 직설적인 이면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국가 지도부 내 폭력적인 파벌 싸움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간부들의 권력남용 및 낭비벽과 같은 현상들은 '기존의 가치로' 당을 되돌리려는 '시진핑의 임무'에 더욱 객관적인 근거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식 모델'을 홍보하기란 조금 불편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새롭게 노력하는 지금, 상황은 크게 변했고, '중국식 모델(한때 '중국식 길'이라는 표현만 사용됐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A. D. 보스크레센스키 : 중국이 글로벌 야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국들은 군사·정치적 표적을 중국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군사·정치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자국의 군사·정치 파트너들을 완전히 재고하는 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관계 성장은 막혔고, 중국에 대한 대안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군사·정치적 대안이 아닌 하이브리드형 대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유라시아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서 여겨지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태 지역 및 아시아 번영의 원천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희망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는데,

4) Available at: <http://news.creaders.net/china/2012/12/04/1212541.html>

그 이유는 중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V. 라보프 : 우리는 아태지역 안보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 그리고 주요 갈등의 '중심지'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V. V. 슝스키 : 아태지역의 이런 다차원적이고 대규모의 변화들이 사전에 '새로운 역내 안보 체제'로 명명된 틀이 피상적으로만 계획된 단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참고로 이 '체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는 예나 지금이나 다자간 논의의 장으로, 무엇보다도 회담 결과가 그 어떤 의무의 형태로도 구성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요소가 제도적 연결 고리로 전혀 얽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 정치·경제 공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곳에는 역내 안보 시스템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 지역이 '전략적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 속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일부 노하우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아직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A. D. 보스크레센스키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비확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억제 대화'를 통해 아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강화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긴장 축소를 지향하는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컨센서스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짧은 숨고르기 상황에서 비승인된 대북 군사 압박이 자제되는 와중에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미일 군사·정치 노선의 조율 강화로도 이어졌습니다.

V. M. 마지린 : 제 생각에 역내 안보 시스템은 분명 중국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실제로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tact, COC) 서명과 더불어) 한반도 및 남중국해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가운데 강화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조건대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안정된 후에는 동서양의 글로벌 대립 중심지가 아태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내 힘의 균형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A. V. 로마노프 : 미중 간 경제 상호연계성이 약화되면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적 갈등의 여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해 타이완 요인을 활용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파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미중 간 경제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관리들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타이완 여행법'을 승인했고, 타이완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허가했습니다. 잠수함 건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여행법은 미중 협력 분위기를 조만간 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법을 미국이 국교 회복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이완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고하려 한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관리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018년 여름에 타이완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중 레토릭은 미국과 타이완 간 군사·정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타이완 독립 지지세력에 기회의 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요인이 타이완 엘리트들의 정치적 자만 증대로 이어진다면, 타이완 해협에서의 갈등 발생 위협은 수배로 커질 것입니다.

A. V. 라보프 : 역내 갈등 문제로 넘어가서, 한반도부터 살펴보시죠.

O. V. 다비도프 : 한반도 문제가 태평양 공간의 전반적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장 본질적인 포인트는 한반도가 그곳에서 지속되는 여러 프로세스와 이런 프로세스의 불확실성 및 심한 변동으로 인해 아직도 완전히 불확실한 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치가 관계가 평탄하지 않은 많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중요 활동 부문이 맞물리는 지역이다보니, 이런 현실의 변화 없이는 안보와 인프라, 혹은 경제·통상 협력 부문에서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 구축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의 정책에서 최근에 있었던 획기적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은 강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이후 올해 초부터 노선을 급격히 변경해 ‘평화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한다고 강력하게 밝혀오고 있으며,

심지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지도부만이 전략적 조치를 취하는데 참여하는 독재 정권의 정책에서 이런 급격한 유턴은 대개 매우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한편 이런 일은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꾸미려고 시도하다가 게임이 의도대로 안 되면 재빨리 뒤로 물러섰던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직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북한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무르익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 계획에 어떤 이상이 생겼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 부족, 혹은 필수 부품 및 재료 부재로 인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상품을 진열대 아래에 숨겨놓고’ 흥정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경제 원조와 안보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진의를 신뢰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북한의 무기가 미 본토 전역을 ‘핵먼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미 2017년 말에)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강력한 위력을 가진 핵폭

탄은 그 자신의 작품이자 그가 특별히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김정은이 직접 만든 현실로, 지난 몇 년 간 동포들의 눈앞에 보여진 유일한 가시적 성과이자 지도자가 가진 최고 권력에 대한 정당성과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북한의 노력은 '인도 시나리오'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클럽 테두리 밖에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군사적 핵능력 보유 권리를 사실상 유지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즉, 트럼프와의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려해봤을 때, 양국의 기대감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큼니다. 북한이 근시일 내에 이 조건에 준비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양국 정상들이 가진 매우 감정적인 성격을 고려해 보면, 회담 결렬은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황이 예기치 않게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정상외교의 재개(2007년에 있었던 김정일과 노무현의 회담이 가장 최근에 열린 만남임)는 남북관계에 일정 부분 안도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무상 원조를 제공받는 형식을 선호하면서 완전한 경제·통상 협력 재개에 중점을 둔다면, 이 점에서 한국 대통령은 극히 제한적인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2010년부터 채택된 수많은 대북 제재가 가동 중이고, 한국의 대내외 사정으로써 인해 제재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이 핵능력 해체의 길로 나설 때가

지는 그 어떠한 대북 조치의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미 간에 조율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V. V. 미헤예프 : 2018년에 한반도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여전히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변화란 북한의 새로운 대외 정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당시 전문가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만,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개발 단계를 마무리지었다고 여깁니다. 핵보유국 지위가 북한 헌법에 명시됐고, 핵 전략이 당 문건과 국가 지도부 연설문에 명문화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세계적으로(미국, 러시아, 중국) 인정받는 일입니다. 북한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인 '인도식 해법'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EU 회원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접촉 외교'를 필요로 합니다. 북한은 핵 안보, 경제 및 문화 협력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핵무장 해제만 예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고 철학적인 성격을 띠니다.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인도식 해법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나설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 전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차기 핵 실험으로 인해 러시아 영토의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

째로는 로켓이 사고로 인해 러시아 영토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이미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슬람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입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국제법상 독립국이 아닌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군사 목적의 핵 프로그램 활성화가 추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다섯 번째로는 북한 내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로든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의 운명이 불확실하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V. M. 마지린 : 제 생각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의 질적인 변화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의 강력한 경제·군사 대국으로 변모할 조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V. V. 미헤예프 : 다른 국가들이 인도 시나리오와 같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회담은 성격에 관계없이 가망이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관련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 줄 주요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국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완전한 핵무장 해제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그 대신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국가들의 노력을 이용하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2005년처럼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한국의 외교계가 또 다시 ‘미끼를 삼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국을 포함해 미국을 따르는 한국 및 일본은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소위 CVID, 즉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를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호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검증이란 개방이 가능한 곳으로만 시찰단의 방문을 북한이 허용하는 것으로서, 2005년의 협정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모든 새로운 게임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국제사회의 경험을 고려해 보면, 가능한 결론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북한 지도부의 인식 속에서는 핵무기만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A. V. 라보프 :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영토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A. D. 보스크레센스키 : 현 상황에서는 남중국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군사·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 다른 역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섬과 기지를 계속해서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그 결과 향후 5년 간 항공모함 4~5척이 건조될 것이며, 그 중 적어도 2척이 최소 배수량 8만톤급에 전자기 캐터펄트(함재기 발사기)를 갖추 수 있는 핵 항공모함, 즉 소위 슈퍼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항공모함을 갖추으로써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자국 힘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모 구축 프로그램은 군사 인프라를 갖춘 인공섬 건설보다 전략적으로는 더욱 이득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인도, 호주, 캐나다, 일본, 태국과 같은 국가들 또한 규모는 훨씬 작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입니다.

V. M. 마지린 : 남중국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강화되지만 할 겁니다. 중국의 가장 큰 경쟁국 중 심지어 베트남(처음으로 '소 혀(Cow Tongue)' 구역에서 해외 파트너들과의 석유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중단하는 데 동의함)과 필리핀(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에 유리하게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음)이 한 발 물러서는 등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립을 거부한 주요 원인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전 세계 및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되는 미국의 모험적 정책 및 압박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패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 개발(베트남은 이미 톤킹 만에서, 필리핀은 분쟁 지역에서 이에 나섬)과 기타 경제 프로젝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철강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반제품을 중국에서 사들여 자국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친 후 세계 시장에 베트남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얼마 전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춰진 대미 통상 동맹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생산관매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 그런 제품에 대해 대미 수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양국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및 베트남과의 대외무역 적자를 줄일 계획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파트너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가 GDP의 15%에 맞먹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대중 무역의 적자, 즉 GDP의 1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E. A. 카니예프 :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서로 타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남중국해에서 10+1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제안한 것과, 두 번째로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필리핀 인프라 투자를 '겨냥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거리를 유지할 용의를 보였다는 사실이 대표적입니다.

A. V. 라보프 : 이제 아태지역의 상황 전개에 대한 주요 역내 플레이어들의 입장을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볼까요?

A. G. 볼로딘 : 인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동방정책이 발표된),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부터 아태지역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야말로 동남아를 향한 인도의 움직임에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적 틀입니다. 인도 외교계는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동남아 국가들을 인도의 '동방' 이니셔티브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더

육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외교계에 도입됐죠.

실제로 ‘동방정책’은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대외 경제관계 규모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의 주요 파트너국가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 규모로 인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를 아태지역 시스템에 통합시키자는 인도 정계의 아이디어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학자들은 아태 공간에서 인도의 지경학적 잠재력이 ‘불충분하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관점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국 시장에 대한 인도산 상품의 접근을 확대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으로써 독자적인 경제 공간을 역의 ‘플레이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이중적인 지정학적 ‘중력’에 대해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친서방 대외 경제활동은 인도에 유형의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만 국가들로부터의 금융 자원 이동은 사실상 인도의 국제수지 적자를 ‘막아주고,’ 이는 원유 및 기타 에너지자원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외정치 우선순위 시스템에서 서아시아가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커서 인도의 ‘전략적 엘리트’는 ‘서방정책(Look West Policy)’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대외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필수 자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인도 지도부가 어떻게 대외정치 우선순위와 친서방뿐 아니라 친동방정책의 연속성을 구축해 나갈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인도의 대외정치 활동 자체가 나름의 ‘방법

론적 교착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어찌면 당연합니다. 2017년 여름에 있었던 73일간의 무의미한 ‘히말라야 대치’는 인도 지도부로 하여금 대중 관계를 재고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양자 간 갈등에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크람 사태 이후’ 새로운 우선순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도-태평양’과 같은 ‘환상 속의 아이디어’는 보다 더 ‘평범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대중 관계에서 ‘새로운 편집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일본과의 ‘전면적인 전략 대화’ 강화, 중앙아시아로의 최단 거리 모색과 같은 현실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아태 지역과의 성공적인 협력에 도움을 줄 국제 정치적 주체성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V. 라보프 : 일본은 어떤가요?

V. G. 슈빃코 : 안보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과 미국이 참여하는 (그리고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정치 동맹 시스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세계질서 모델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추세고, 이런 추세는 일본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주도하에 아태지역에서 구축된 군사·정치 관계 시스템에 공고히 편입된 상황에서, 자국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점차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안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몇 가지 현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

다. 첫째, 이 부문에서 일본의 우선 과제(한반도에서 군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토의 타격 가능성 배제를 보장하는 일과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 수역 및 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 확정을 위한 중국의 무장 행동을 예방하는 일)들은 미국의 우선 과제와 확실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이런 상황은 공통의 역내 과제 중 잘해야 두 번째 순위입니다.

둘째, 일본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지위가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이)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독자적 어젠다를 적극 개진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더 큰 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 체계로 이루어진 미국 중심 안보 시스템의 구조 전체의 안정성과, 실질적 도전 및 안보 위협이라는 맥락 속에서 덧없는 미국의 동맹국 지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이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미국 중심 안보 시스템의 이데올로기적 구성 요소('공통의 가치,' '가치 외교,' '비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사회의 대응')가 정작 미국이 역내 전략을 마련할 때는 미국의 행동의 자유에 거의 제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역내 '비자유'국가들에 대한 관계 동결을 압박하는 일은 일본 정치인들에게 터무니없이 위선적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외교 부처의 인사 정책이 일본에게 매우 불편한 혼선을 주고 있고, 여기에 인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일본 지도부

는 미국의 공식 정책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안보 보장 전략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보장 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아직은 (아마 우선 순위나) 정책적 성격의 공식 문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행동 조율 없이 안보 부문에서 기타 역내 국가들과 점차 독자적으로 합의를 모색하고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득권 세력이 글로벌 차원의 자유화된 세계경제 구축이라는 노선을 계승하지 못하자 대외경제 전략 부문에서 일본 정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재계와 학계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 자유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 정계는 트럼프가 경제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떠들썩하고 성공적인 대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문에서 일련의 가시적인 실질 조치를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 중에는 예를 들면 미국의 주도로 달성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합의를 부정한 것과, 자유무역에 관한 다른 국제 다자간 협정의 조건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 일,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한 일 등이 있습니다.

상황 재고에 큰 계기가 된 사건은 2018년 3월 미국이 일본산 금속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일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이나 특권을 가진 파트너국이 전혀 아닌 국가 소속의 기업들이 인상 유예의 형식이긴 했지만, 수입 관세 인상 체제로부터 면제됐습니다.

본질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태지역의 경제 세계화와

세계 교역 체제 및 아태지역의 국가 간 투자 체제 자유화를 지지하는 진영이 재편성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프로세스의 원동력으로 여겨 지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아니었던 일본과 호주가 이런 움직임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 국가야말로 (이제는 미국이 불참해) 규모가 축소된 TPP 형태를 띤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즉 TPP11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근시일 내에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들 간 통상 전면전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일본의 주요 대외 파트너인 미국 간의 경제 관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례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잖아도 미국이 일본의 안보 보장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회의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A. V. 라보프 :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A. G. 볼로딘 : 아태지역 발전의 심각한 문제이자 동시에 숨겨진 자원은 여전히 아세안 회원국들의 내부적 경제 불균형을 극복하는 일

입니다. 발전 격차를 좁히자는 과제는 아세안 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회원국들을 받아들일 당시에 정치적 과제로 간주됐습니다.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 감소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서 정치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국가 간) 관계를 응집해 결국 국내 및 국제정치의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아세안의 지위를 자연스럽게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태 지역에서 아직은 입지가 약한 러시아와 인도를 통해 (중국과 미국 등) 역내 지정학적 세력의 ‘평등화’를 최대한 복잡하게 하려고 추구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E. A. 카나예프 : 아세안은 오늘날 전 세계적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및 역내 경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경향은 아세안에 일련의 과제를 안겨주는 목전의 4차 산업 혁명입니다. 그 중 기본적인 과제는 아세안이 실현 중인 경제 지역주의 이니셔티브의 경제협력 규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경제교류 가상화 및 생산 자동화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회원국들이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입입니다. 아세안에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날로 강해지는 ‘디지털’ 구성 요소를 갖춘 ‘불규칙한 정보 전쟁’과 국제 안보 위협의 침여함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및 역내 제도의 기능 장애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으로 하여금 아세안이 이끄는 플레이어가 아닌, 따르는 플레이어로서 ‘디지털’ 시대에 편입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아세안에게 지역적, 광역적 차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프로젝트들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프로젝트에 관해 말하자면, 아세안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제도적 포맷인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자간 군사 협력(Quad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이하 'Quad') 협정의 참가국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 이 포맷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라면, 어떻게 아세안의 내부적 결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의 성공을 담보해 주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정세에 Quad의 전개가 손해가 된다면, 아태지역의 안보대화 포맷의 조정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아세안의 능력에 인도-태평양 지역 프로젝트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또한 아세안과 대화 파트너국가들 간 개별적인 협력 요소라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는 어떤 경제 어젠다를 가질 것이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어떤 조건으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해답이 없는 상태고, 회원국들의 Quad 참여뿐만 아니라 Quad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 역시 아세안의 국제적 입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를 아세안에게 던져줍니다. 아세안은 한편으로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환

영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에는 최소 2.3조 달러에서 최대 2.8조 달러가, 혹은 연간 1천 840억 달러에서 2천 1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세안의 인프라 펀드 기금은 4억 853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동남아 국가들의 항만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이들 국가 지도부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은 중국이 군사적 수단 등을 통해 자국의 투자를 보호하고, 증강하는 경제적 역량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동남아 전문가들은 이미 아세안이 그 일부가 될 중국 중심의 대륙 안보시스템이 아태지역과 유라시아에 구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파트너국가들의 우선순위에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간 외교 이니셔티브인 ARF, ADMM-Plus, EAS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이 개별국에 대한 투자 면에서도, 아세안 광역 가스관 구축 사업(Trans-ASEAN Gas Pipeline)과 같은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면에서도 그 조건으로 아세안에 국제 현안에 대한 양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환상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중국의 접근법뿐만 아니라, 맞대응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시는 이미 여럿 있습니다.

아세안 중심의 안보 대화 포맷과 이들의 조정자로서의 아세안의 입지가 소외되면서 그 여파로 경제 지역주의 이니셔티브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수요가 아태국가

들의 우선 순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RCEP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와 일대일로 전략을 연결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RCEP 실현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구축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통합 협력 어젠다를 제안하는 ‘포용적인 아태지역’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A. V. 라보프 :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변화들이 러시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지를 살펴봅시다.

A. N. 표도롭스키 :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내부 과제의 해결책을 아태지역에서 형성되는 도전과 기회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V. M. 마지린 : 아태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관측되는 경향들은 중·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건과 경향이 객관적으로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과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균형추나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 지역으로 러시아가 ‘귀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를 위해 힘을 갖추고 소망한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아태지역에서의 ‘피벗 투 아시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러-중 동맹이

결성되지 않았다는 표도롭스키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국 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 러시아의 경제력이 증강되고 러시아가 파트너국가들이 접근 가능할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때만 생겨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러시아는 EAEU-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형태로 미래에 대한 기초 작업을 다쳐나가고 있습니다(베트남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 자유무역지대는 보통 지정학적 의미를 갖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V. V. 미헤예프 : 중국은 미국과의 게임에서 러시아를 카드로 이용할 것이고, 대러 군사·정치 협력은 중미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독자적인 아태지역 어젠다가 없습니다. 남중국해는 러시아의 안보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게다가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베트남 간 복잡한 정치·영토 분쟁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독자적인 갈등 해결책이 없는 채 중국의 행동 노선을 좇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TPP11 및 중미 협력 아이디어의 부활에 대한 전망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협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소위 대(大) 유라시아 구상은 러시아를 아태지역에 가깝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리할 것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러시아에게 필요한 것은 대규모 계획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첫째, 아태국가들에게 경제적 매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고, 둘

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아태지역에서 군사·정치적 신뢰 관계 및 안보 부문의 상호 이익을 구축하며 흑역 발생할지 모르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역내 리더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E. A. 카나예프 : 이런 과정들이 아세안과 러시아의 대화 전개 전망에 미칠 영향력을 평가해보면, 앞서 고찰된 아세안의 어려움은 러시아의 경제 문제와 서방의 대러 제재, 저유가 등과 일치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아세안과 러시아 간 통상·투자 교류의 규모 축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세안 내부에 분리선을 그은 인도-태평양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발전은 아세안과 러시아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취하는 대중 정책의 편향은 아세안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러시아는 세 가지 근본적인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이들에게 멋진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는 다극화된 세계의 구축입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ARF, ADMM-Plus, EAS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 강화이고, 그에 따라 많은 아태지역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회담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와 아세안이 독자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소위 상호연계성 증대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와 아세안은 여러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대 유라시아’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아세안-상하이협력기구-EAEU 노선을 통한 ‘대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제도적 뼈대

를 구축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2016년 5월에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담 참가국들이 경제 협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런 포맷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맷의 정치 및 군사적 요소 또한 못지않게 유망합니다. 아세안이 ARF, ADMM-Plus, EAS 차원에서 다수의 국제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 조만간 확대된 SCO의 활동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EAEU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런 경험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제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한 경험과 잠재력을 아세안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은 해에 러시아가 아세안의 의장국인 필리핀과 향후 확대를 염두에 두고 군사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 일은 상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안보 강화는 다른 부문에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러시아-아세안 대화의 통합 요인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SCO-EAEU의 협력 발전은 양쪽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A. D. 보스크레센스키 : 역내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보다 더 ‘정교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중국의 군사기술 잠재력 강화와 같이) 러시아가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생겨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기회 중 중국과 과학·기술 협력

의 발전을 꾀고 싶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제재를 도입한 상황에서 이런 협력의 평등성 및 상호호혜성이 강화될 기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큼니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大) 중국'과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생산 사슬에 러시아가 편입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A. V. 라보프 : 너무나도 광범위한 문제가 다루졌고, 규모의 여파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는 큰 변화가 아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의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이 연구자들과 오늘 회의 참가자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V. V. 슝스키 : 오늘 발표된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에 있었던 '아시아의 기적'을 폄하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논의는 이런 영광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성공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수십 년 간 함께해왔던 이런 도취감에서 벗어나는 편이 좋다는 내용이었습니

편집부 :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 날부터 아태지역에 큰 국제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편집부는 짧은 후기 형식으로 논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언론이 역사적 만남으로 묘사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평가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안보 문제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는 그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의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공동 선언문에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의향만이 언급됐을 뿐이다. 김정은은 아무런 양보 없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회담과 타협에 나설 준비가 된 리더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없고, 시간을 벌고 국제 사회와 경제·통상 협력을 재개하며 국제 금융 원조와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활성화된 회담 과정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핵무장 해체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의 의견으로 귀결됩니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토론 참석자 명단>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안드레이 라보프 (A. V. Ryabov)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편집장
- 비탈리 슈빗코(V. G. Shvydko)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일본 경제정치부장
- 안드레이 볼로딘(A. G. Volodin)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GIMO) 교수
- 안드레이 카르네예프(A. N. Karn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수석연구원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ivskii) IMEMO 아태지역 책임연구원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 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예브게니 카나예프(E. A. Kanaev)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교수
- 알렉세이 보스크레센스키(A. D. Voskressenskii)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GIMO) 교수
- 블라디미르 마지린 (V. M. Mazy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베트남·아세안연구센터장
- 빅토르 쉘스키 (V. V. Sumsky) IMEMO 책임연구원

- 원제 : Переформат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зии : векторы и динамика изменений
- 출처 : 『세계경제·국제관계』, 2019, 63권, No. 1, pp. 93-103.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Primakov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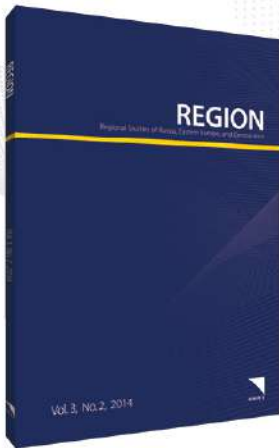
Founded in 1907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2019

Vol.3 | No.1 Spring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